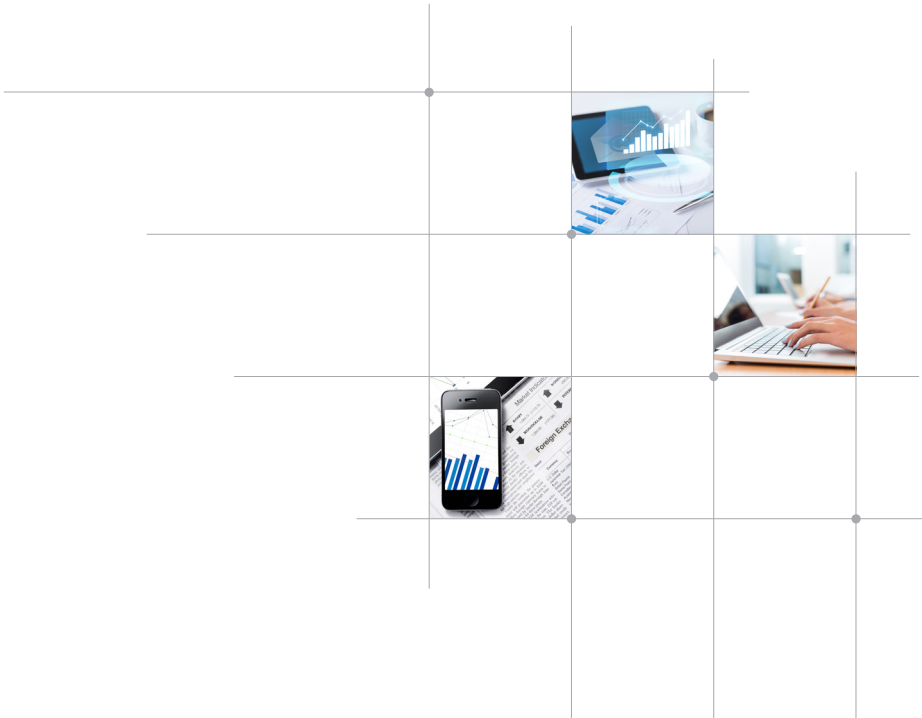




#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2023. 12.

이경영 · 최근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2023. 12.

이경영 · 최근호



## 서 언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2005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이전은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대상 기관들은 개별 이전하거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 인식,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효과 인식, 정주여건 중 중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주민의 정주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즉 입지 선정 및 기관 배치, 입지 선정 후 혁신도시 조성, 정책 효과 제고 노력 등과 각각 관련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에 대한 기초 현황을 검토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비광역시 지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 대비 2022년의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지역 내 종사자 수 증가율 역시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 지역에서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이상의 검토자료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및 이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는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 지역에서 주민의 체감 정도가 높았으며, 지역 내에서는 혁신지구와 인접할수록 주민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의 발전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는 균형적으로 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중에서는 일자리 여건에 대한 주민의 체감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에서는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시행 중인 혁신도시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보면 크게 광역시와 비광역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나 주민의 정주여지에 대한 영향요인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제고 노력과정에서 광역시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두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혁신도시 주민의 정책적 선호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개발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주민의 정책 수용도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이경영 박사와 최근호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 먼저, 본원의 박한준 박사과 배진수 박사, 충남대학교 한동숙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문운상 박사, 국토연구원 권영섭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 한양대학교 이영교수, 인천대학교 김지영 교수 등은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심의회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외부 심사자 두 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현황 정리, 보고서 양식 수정 등 많은 도움을 준 박진우 위촉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

하고 싶다.

끝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책임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향후 발견  
될지 모르는 오류에 대해서는 저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본 연  
구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202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의 하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2005년 기준 전국 405개 공공기관 중 85%에 해당하는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이 중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폐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개별이전 하거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나 일자리 증가율, 고용 증가율 등 경제적 측면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 즉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해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현지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역을 이탈한다면 이는 정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이 위치한 시·군·구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06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대상지역으로 삼은 것은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완주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12개 시·군·구이다.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역주민 사전인터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

였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가 일관된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응답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정주여건의 지역적 범위나 인식 수준의 범위 등을 해당 설문 앞에 반복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표본에 대해서는 지역 내 연령비율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와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인식 수준이 혁신도시별, 또는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 혁신지구와 인접성에 따라, 또한 거주 시점을 기준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여 이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중점 개선영역을 도출하였다. 즉, 정주여건 중 주민의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 대비 2022년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광주·전남, 충북, 강원, 경북 혁신도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대비 2022년의 지역 내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광주·전남, 충북, 경북, 강원 혁신도시 등이었다. 즉, 인구 증가율이나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비광역시 지역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기초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인식은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 지역에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증대 효과에 대한 인식은 경북, 경남,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순으로,



일자리 증가 효과에 대한 인식은 경남, 경북, 광주·전남, 강원 혁신도시 순으로 각각 체감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기초통계자료의 경향성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인식은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 정도는 혁신지구와 인접성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혁신도시의 개별 정주여건 중에서는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주택 및 주거환경,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시 대비 비광역시 거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정주여건의 차이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상업시설 및 의료시설 등에서 원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주민의 경우 지역의 발전 정도가 낮았던 시기부터 거주하였기 때문에 만족 수준이 더 크게 체감되었을 수 있다. 넷째, 개별 정주여건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일자리 여건, 의료시설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일자리 여건이 도출되었다. 혁신도시별로도 부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 일자리 여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의지 증대에는 지역 안전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가령 상업시설은 비광역시 지역에서만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지 선정 시 지역의 발전 정도와 기관 간 균형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에서, 지역 내에서는 혁신지구 인접할수록 주민의 체감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공

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대상지역 선정 및 지역 내 기관 배치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인재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체감 정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지역 인재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졸업 예정)한 인재’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의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지역출생이나 지역 내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주민의 체감 정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차별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주민의 정주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광역시와 비광역시 지역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광역시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비광역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상업시설의 개선 및 증대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용성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 목 차

I. 서론 .....	17
II.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	20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배경 및 목적 .....	20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법·제도 .....	24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	25
III.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9
1.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 .....	29
가. 국내 연구 .....	29
나. 해외 연구 .....	31
2. 혁신도시 정주여건 연구 .....	33
3. 소결 .....	36
IV. 연구설계 .....	38
1. 연구 대상 선정 .....	38
가. 지역 범위 .....	38
나. 대상 범위 .....	39
2. 자료 수집 .....	40
가. 표본설계 .....	40
나. 설문항목 도출 .....	42
다. 설문조사 실시 .....	50
3. 분석의 틀 .....	51

---

V. 실증분석 .....	55
1. 혁신도시의 기초 현황 .....	55
가. 혁신도시 인구 현황 .....	57
나. 혁신도시 산업 현황 .....	69
다. 혁신도시 재정 현황 .....	74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	79
가. 설문응답 개요 .....	79
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 .....	84
다. 정주여건 개선 효과 .....	89
3.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영역 도출 .....	96
가. 정주여건의 중요도 .....	96
나. 중요도 대비 만족도 분석 .....	97
다. 소결 .....	101
4.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101
5.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추가 의견 ·	111
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	111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타 의견 .....	115
6. 소결 .....	120
VI. 결론 .....	123
참고문헌 .....	127
부록 .....	132

---

---

## 표목차

〈표 II-1〉 공공기관의 연도별 신규 채용 .....	21
〈표 II-2〉 2000년대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실적 .....	22
〈표 II-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별 현황 .....	26
〈표 II-4〉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시기 및 규모 .....	28
〈표 III-1〉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국내연구 .....	30
〈표 III-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해외사례 연구 .....	33
〈표 III-3〉 혁신도시 정주환경 연구 .....	35
〈표 IV-1〉 혁신도시 인구 현황 .....	39
〈표 IV-2〉 표본설계(안) .....	41
〈표 IV-3〉 설문항목 도출을 위한 지역주민 사전인터뷰 질문지 .....	43
〈표 IV-4〉 지역주민 사전인터뷰 결과 .....	44
〈표 IV-5〉 설문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	46
〈표 IV-6〉 설문항목 .....	48
〈표 IV-7〉 설문 응답 가이드 .....	51
〈표 IV-8〉 응답자 구분 .....	54
〈표 V-1〉 통계자료 항목 및 자료 출처 .....	56
〈표 V-2〉 혁신도시별 인구수 변화 .....	59
〈표 V-3〉 혁신도시별 세대 수 변화 .....	61
〈표 V-4〉 혁신도시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 .....	62
〈표 V-5〉 혁신도시 만 19세 이하 인구 비중 변화 .....	63
〈표 V-6〉 혁신도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	64
〈표 V-7〉 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 현황 .....	65

---

〈표 V-8〉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	67
〈표 V-9〉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 변화	70
〈표 V-10〉 혁신도시의 총종사자(근로자) 수 변화	72
〈표 V-11〉 혁신도시의 상용근로자 비중 변화	73
〈표 V-12〉 혁신도시의 자영업자 비중 변화	74
〈표 V-13〉 혁신도시별 세입결산(총계) 규모 변화	76
〈표 V-14〉 혁신도시별 이전수입 결산(총계) 규모 변화	78
〈표 V-15〉 설문응답 현황	80
〈표 V-16〉 가중치 적용한 표본 현황	81
〈표 V-17〉 응답자 특성	82
〈표 V-18〉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혁신도시별 분석	85
〈표 V-19〉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혁신도시 규모별 분석	86
〈표 V-20〉 인구 및 일자리 효과: 기초통계 및 인식 자료 순위 비교	87
〈표 V-21〉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88
〈표 V-22〉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88
〈표 V-23〉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이주민의 이전 거주지별 비교	89
〈표 V-24〉 정주여건 만족도: 지역별 분석	91
〈표 V-25〉 정주여건 만족도: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92
〈표 V-26〉 정주여건 만족도: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93
〈표 V-27〉 정주여건 만족도: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94
〈표 V-28〉 정주여건 만족도: 이주민의 이전 거주지별 비교	95
〈표 V-29〉 정주여건에 대한 중요도	96
〈표 V-30〉 일자리 여건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8
〈표 V-31〉 문화체육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9
〈표 V-32〉 복지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9
〈표 V-33〉 혁신도시별 중점 및 점진 개선영역	100
〈표 V-34〉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102

---

〈표 V-3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103
〈표 V-36〉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1) .....	105
〈표 V-37〉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2) .....	106
〈표 V-38〉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	107
〈표 V-39〉 지역 안전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	109
〈표 V-40〉 주택 및 주거환경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	109
〈표 V-41〉 상업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	110
〈표 V-42〉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지역별 분석 .....	112
〈표 V-43〉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만족도 .....	113
〈표 V-44〉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	114
〈표 V-45〉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인접성에 따른 비교 .....	114
〈표 V-46〉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	115
〈표 V-47〉 이전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지원사항) .....	115
〈표 V-48〉 이전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지원사항, 지역별 분류) .....	117
〈표 V-49〉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18
〈표 V-50〉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지역별 분류) .....	119

---



## 그림목차

[그림 II-1]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	24
[그림 II-2] 혁신도시 개발 유형의 분류 .....	26
[그림 IV-1] 설문항목 도출 과정 .....	42
[그림 IV-2] 분석의 틀 .....	52
[그림 V-1] 혁신도시 인구수 및 증가율 변화 .....	58
[그림 V-2] 혁신도시 세대 수 및 증가율 변화 .....	60
[그림 V-3] 혁신도시 사업체 수 및 증가율 변화 .....	69
[그림 V-4] 혁신도시 근로자(종사자) 수 및 증가율 변화 .....	71
[그림 V-5] 혁신도시 세입결산(총계) 규모 변화 .....	75
[그림 V-6] 혁신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의 이전수입 비중 변화 .....	77
[그림 V-7]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	97

---

---

# I. 서론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이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실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5년이다. 당시 전국 405개 공공기관 중 85%에 해당하는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이원희 외, 2015). 이에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고 통·폐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개별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19년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기초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는 크게 ‘인구 및 일자리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를 직접적 효과라고 한다면, 후자는 간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권영섭 외, 2015). 먼저,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목하고 있다(김민곤 외, 2017; 김태환 외, 2020; 문운상, 2021). 대표적으로 문운상(2021)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직접적 기대 효과인 ‘관련 인구의 지방분산’ 및 ‘이전 공공기관 연관 산업 일자리 증가’ 등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일부 연구들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검토하고 있다(권영섭 외, 2015; 김현정 외, 2022; 백민·안형순, 2018).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인구 및 일자리 증대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와 원주민의 재정

착을 도모하고 있다. 가령, 권영섭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의료기관, 교육시설 등 정주여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처럼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실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p. 31).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거주 인구의 지속가능성이다.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역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지역 내 정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3%에 불과하다(문윤상, 2021).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지역 내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현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역을 이탈한다면, 이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및 평가가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 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2003~2015)』에 따르면 주민들의 현지 재정착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p. 109).

이러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부 과업들을 수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지역별, 응답자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 개선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셋째, 혁신도시 거주민의 정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주민의 지역 내 지속거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주 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이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인다면 지역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현황 점검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때, 이전 규모가 작은 제주 서귀포시와 지리적 특성상 혁신지구와 관련성이 낮은 표본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은 전북 완주군은 제외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고, 제Ⅲ장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표본 설계 및 설문항목 도출, 분석의 틀 등 연구설계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Ⅴ장 결과분석에서는 혁신도시의 인구 및 산업, 인프라 현황 등을 검토하였고,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Ⅵ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

## 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

###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관련 연구(김광익 외, 2006; 문운상, 2021)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먼저,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대구 구상)이라는 정책의제를 발표한 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sup>1)</sup>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4년에는 공공기관 현황 및 지자체 의견조사, 이전기관 선정을 위한 검토 작업 등을 거쳐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2004헌마554, 2004헌마566)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2004. 10. 28.),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 회의(2004. 11. 26.), 일반시민 대상 시·도 순회 정책설명회(2004. 12. 9.~28.) 등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후 2005년 6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발표되면서 정

---

1) 동법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된다. 2018년 3월 이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이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자체별 지원단 등이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추진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I-1〉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요 추진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1〉 공공기관의 연도별 신규 채용

시기	추진경과
2003.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대구 구상)을 발표</li> <li>-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제시</li> </ul>
2003.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마련</li> <li>- 여당이 소수인 상황에서 특별법안 국회 통과</li> </ul>
2004.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마련</li> <li>- 균형위(8. 23.) 논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8. 31.)</li> </ul>
2004. 10. ~ 200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sup>1)</sup> 위헌결정에 따른 위기</li> <li>-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10. 21.) 후 공공기관 이전 회의론 확산</li> <li>-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지 지속 표명</li> <li>* 시·도지사 간담회(10. 28., 11. 26.), 시·도 순회설명회(12. 9.~28.)</li> </ul>
2005.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발표</li> <li>- 「행복도시건설특별법」<sup>2)</sup> 제정(3. 18.) 후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갈등관리·홍보·대안분석, 국회보고 등 본격 추진</li> <li>- 이전정책에 대해 시·도와 노조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시·도 간 기본협약(5. 27.) 및 노정협약(6. 21., 6. 23.) 체결</li> <li>- 심포지엄(5. 9.)·공청회(5. 27.), 기자간담회,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li> <li>* 홍보책자 발간(2회), TV(1일 2회, 6월 중), 라디오·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li> <li>- 균형위(6. 23.) 및 국무회의(6. 24.)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6. 24.)</li> <li>*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6. 28.)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의지 재확인</li> </ul>

주: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2)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자료: 김광익 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백서 연구』, 2006;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16; 남창우 외,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2020을 참고하여 내용 재작성

2005년 정책 수립 당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7.1%(2002년 기준)가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 100대 기업 본사의 91%, 벤처

기업의 70%, 금융대출의 67%,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 지방 경쟁력 저하 및 인구 유출 심화, 지역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기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1982), 「공장총량제」(1994), 「과밀부담금제」(1994) 등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입지 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 방식이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육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간주하였다(국토교통부, 2016).

참여정부 이전인 1973년, 1980년, 1985년에도 각각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실시한 바 있다. 1973년의 1차 이전에서는 4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는데, 총 40개 기관이 이전하였다. 1980년의 2차 이전에서는 과천과 대덕연구단지로의 이전을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1985년의 3차 이전에서는 대전 둔산지구의 9개청을 중심으로 이전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서울에서 서울 이외 지역(과천, 대전 등)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적 성격이 강했다. 이전한 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사례도 있었으며, 서울에 지사나 분원을 설치한 기관이 있어 이전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였다. 이전과정에서 기관의 업무특성 및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 이전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책 등도 다소 미흡했다는 문제도 있었다(이동우 외, 2006).

〈표 II-2〉 2000년대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실적

구분	1차 이전	2차 이전	3차 이전
목적	•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억제	• 수도권 인구과밀문제 해소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소산
기관 특성	•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 비용이 적게 드는 기관 • 운영상 이전이 합리적인 기관	• 이전이 용이한 기관 • 대상기관의 기능 및 인구 흡인 효과가 큰 기관	• 기능이 특정 분야 타 기관과 연계가 적은 기관 • 지방입지가 효율적인 기관
이전 형태	• 이전 가능한 기관의 개별 이전	• 이전이 가능한 기관의 개별이전	• 청(廳) 단위 기관의 집단이전

〈표 II-2〉의 계속

구분	1차 이전	2차 이전	3차 이전
이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에 대비 및 건물 보유 지역</li> <li>• 업무상호연관기관은 동일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천 등)에 7개 기관</li> <li>• 비수도권(대덕 등)에 7개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신탄진 및 둔산 지구 정부대전청사</li> </ul>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개 정부소속 출연기관</li> <li>• 22개 정부투자 출자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 정부소속 출연기관</li> <li>• 1개 정부투자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개 정부 소속기관</li> </ul>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계획기관 46개 중 40개 기관 이전</li> <li>• 법무연수원 등 18개 정부 소속</li> <li>• 한국도로공사 등 22개 정부 투자 출자기관</li> <li>• 기관의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서울맹학교 등 2개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계획기관 14개 중 10개 기관이 이전</li> <li>• 국립지리원 등 9개 정부 소속 출연기관과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토지공사 1개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이전 대상 13개 기관 중 전매청 1개 기관만 이전</li> <li>• 최종적으로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등 9개 청 단위 기관과 정부기록보존소 등 10개 기관 이전</li> </ul>

자료: 이동우 외,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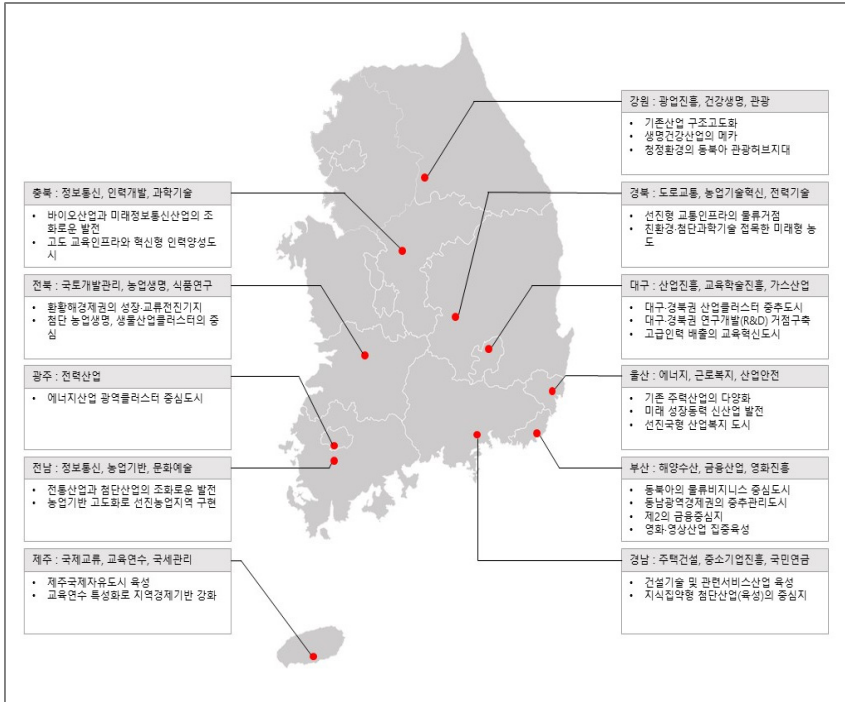
한편, 2005년 6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76개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sup>2)</sup>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였다.<sup>3)</sup> 여기서 형평성의 경우 지역별 발전수준 및 규모가 유사한 시·도에 기관들의 규모, 기관 수 등을 균등하게 배정한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각 지방의 여건과 특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을 기능군별로 분류하여, 당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II-1]에는 시·도별 이전 기능군 및 지역발전 전망이 정리되어 있다.

2) 기관들의 통폐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한 기관은 153개 기관이다.

3) 대전은 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 대상지역에서 배제되었으며, 충남의 경우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본 계획(안)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림 II-1] 시·도별 이전 가능 및 지역발전 전망



자료: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2005a;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16을 토대로 재작성

##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적 근거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에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와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부터 과정, 이전 이후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 등 공공기관 이전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할 지역에 혁신도시(지구) 건설 방안을 마련하였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였는데(건설교통부, 2005b), 혁신도시 개발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기존 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기존 도시 활용형’의 경우 세부적으로 모도시의 도심 인근에 입지하는 ‘재개발 방식’과 모도시 외곽의 미개발지를 활용하는 ‘신시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혁신지구 개발 방식은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방식, (독립) 신도시형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재개발 방식의 경우 소규모 혁신지구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형태로 부산 혁신도시가 재개발 방식에 해당한다. 부산에는 동삼혁신지구, 문현금융단지, 센텀시티 등 3개 지구 및 공동주거지가 각각 건립되었다. 대구,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은 중규모 개발 방식인 신시가지형으로 혁신지구를 개발했으며,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지역은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 신도시형으로 도시를 건설하였다.<sup>4)</sup> [그림 II-2는 혁신도시 개발 유형 3가지를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4) 정유선(2020)은 강원,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독립 신도시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발된 지역이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신시가지형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II-2] 혁신도시 개발 유형의 분류



자료: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2005a; 정유선,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기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20을 토대로 재작성

10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구체적으로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전 기관 수가 10개 내외로 대부분 비슷하였다. 이 중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이전 기관 수 총 16개, 이전 인원 7,262명으로 규모 면에서는 가장 많았다.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기관 수는 11개였으나, 이전 인원은 6,088명으로 이전 기관 수 대비 이전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공기관들은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혁신도시 이전을 실시하였는데 기관 이전이 가장 빨랐던 시기는 2012년 12월(부산, 대구, 제주)이며, 가장 늦은 시기는 2019년 12월(충북)이었다. <표 II-3>에는 연도별·혁신도시별로 이전 기관들의 수와 이전 인원이 정리되어 있다.

<표 II-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별 현황<sup>1)</sup>

혁신도시	기관 수	기관유형별 개수	총이전인원(명) <sup>2)</sup>	이전시기
부산 혁신도시	13개 기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5개 소속기관 2개	3,457	2012. 12.~ 2017. 12.
대구 혁신도시	10개 기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5개 기타공공기관 1개 소속기관 2개	3,277	2012. 12.~ 2015. 10.

〈표 II-3〉의 계속

혁신도시	기관 수	기관유형별 개수	총이전인원(명) <sup>2)</sup>	이전시기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기관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8개 기타공공기관 2개 소속기관 3개	7,262	2013. 12.~ 2019. 1.
울산 혁신도시	9개 기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1개 소속기관 2개	5,860	2013. 1.~ 2019. 2.
강원 혁신도시	11개 기관 <sup>3)</sup>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1개 소속기관 1개 공직유관단체 1개	6,088	2013. 11.~ 2017. 4.
충북 혁신도시	11개 기관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4개 소속기관 3개	3,125	2013. 11.~ 2019. 12.
전북 혁신도시	12개 기관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개 소속기관 7개	5,300	2013. 11.~ 2017. 9.
경북 혁신도시	11개 기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2개 소속기관 6개	5,451	2013. 4.~ 2016. 3.
경남 혁신도시	11개 기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5개 소속기관 1개	4,249	2013. 10~ 2017. 12.
제주 혁신도시	6개 기관	준정부기관 1개 소속기관 5개	752	2012. 12.~ 2015. 10.

주: 1)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상세 현황은 〈부록 1〉에 첨부되어 있음

2)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인원은 지방이전계획상 승인인원 기준

3) 2021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됐으므로, 12개 기관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https://innocity.molit.go.kr>, 검색일자: 2023. 2. 16.

혁신도시의 입지, 규모 등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2005. 7. 27.)에 따른다. 각 시·도별로 20인 이내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

며 위원회의 평가작업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입지를 확정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0개 혁신도시의 입지가 결정됐으며 혁신도시의 입지, 규모, 선정시기 등은 <표 II-4>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4>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시기 및 규모<sup>1)</sup>

(단위: 만m<sup>2</sup>)

혁신도시	선정시기	규모	비고
부산	2006. 3. 30.	93.5	3개 지구 및 공동주거지 총합
		61.6	영도구 동삼지구(해양)
		10.2	남구 문현지구(금융·기타)
		6.1	해운대구 센텀지구(영화)
		15.6	남구 대연지구(공동주거지)
대구	2005. 12. 20.	421.6	동구 신서동 등 9개동 일원
울산	2005. 12. 19.	299.1	중구 우정동 등 12개동 일원
광주·전남	2005. 11. 30.	736.1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강원	2006. 1. 16.	358.5	원주시 반곡동 일원
충북	2006. 2. 3.	689.9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전북	2005. 11. 30.	985.2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중동·만성동 일원
경북	2005. 12. 23.	381.2	김천시 율곡동 일원
경남	2005. 12. 22.	409.3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제주	2005. 12. 23.	113.5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주: 1) 입지선정 당시와 현재의 규모, 지명 등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음.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 실제 개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입지 지역의 지명이 바뀐 것 등의 영향임. <표 II-4>는 입지선정 당시의 기준이 아닌, 현재 기준의 입지 위치와 규모로 수정하여 정리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 2016;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http://innocity.molit.go.kr>),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를 참고하여 재작성

---

##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 1.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

#### 가. 국내 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구 및 일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로 인구 및 일자리 증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주목한 국내 연구들은 인구 분산, 일자리 및 고용 창출, 지역 내 총생산(GRDP) 및 지방세 등을 주요 분석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인구분산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인구분산 혹은 혁신도시의 인구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권영섭 외, 2015; 이유철·김찬호, 2020).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계청의 인구 현황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인구분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전이 완료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수도권 인구가 혁신도시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인구분산 효과가 거의 없거나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한다(김태환 외, 2020; 문윤상, 2021).

다음으로 일자리 및 고용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혁신도시의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에 주목하고 있다(김준성, 2022; 변재연, 2016; 조규민·손동욱, 2020). 예를 들어, 김준성(2022)은 혁신도시의 종사자 수와 창업기업 수를 분석하였으며, 조규민·손동욱(2020) 역시 종사자 수를 분석 대상으로 다루었다. 또한 변재연(2016)은 혁신도시의 이전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성과가 커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고창수·이환웅(2020)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지역의 민간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혁신도시가

구성된 지역과의 인접성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은 검증하였다.

끝으로 GRDP나 지방세 등을 측정한 연구들이다. 먼저 권영섭 외(2015)는 혁신도시의 지방세액을 주목하였으며, 김준성(2022)은 GRDP를 분석하였다. 반면, 김민곤 외(2017)는 혁신도시의 지방세액과 1인당 GRDP 등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액이나 GRDP 등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국내연구

저자	연구 제목	주요 분석 지표
권영섭 외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 인구수, 인구이동 현황, 종사자 이주형태, 지방세액, 소비액, 지역대학과의 MOU 체결 현황, 주택가격, 동반이주기업 현황 등
이원희 외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이전 공공기관의 R&D 네트워크 현황·효과성 등
변재연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 기관 이전 진행 현황, 가족동반 이주율, 지역인재 채용비율, 지방세액, 기관 출장비, 퇴직자 수, 협력사업 성과 등
김민곤 외 (2017)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1인당 GRDP, 지방세액, 기반고용비율, 사설기관교육 수, 사업체 수 등
고창수·이환웅 (2020)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확대가 지역 민간고용에 미치는 영향』	• 업종별 및 공공기관과의 인접 성별 민간고용 현황
김태환 외 (2020)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전략」	• 인구 현황, 계획인구 달성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정주환경 만족도, 공공기관 이전 방식 등
이유철·김찬호 (2020)	「혁신도시 개발성과의 평가와 검증에 관한 연구」	• 인구 변화, 인구중심점, 지가변화, 토지소유 현황, 핵심산업 입지상계수(LQ), 1인당 소득 등
조규민·손동욱 (2020)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 등록 인구수, 지방세, 고용자 수 등
문윤상 (2021)	「인구효과 및 민간일자리의 영향 검토」	• 혁신도시별 계획인구 달성률, 가족동반 이주율, 인구이동통계, 산업별 고용 효과 등
김준성 (2022)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 GRDP, 노동자 수, 지역의 창업 건수, 광업·제조업 노동생산성, 입지계수(LQ) 등

자료: 저자 작성

## 나. 해외 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되었다. 해외 연구들 역시 대부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인구 및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리옹주택 보고서(Lyons Housing Review)」를 기반으로 런던 및 영국 동남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2만 5,000명 규모의 공공부문 및 관련 일자리를 이전한 바 있다. Marshall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이전 정책은 공공기관 운영비 절감 등의 의미를 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도모, 수도권외의 과열문제 해결, 각 지역의 인프라와 인적자원 부족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Faggio(2019)의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이 지역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대해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전지역 인근의 고용(주변 1~3km 지역)이 이전지역 중심(주변 1km 이내)으로 이전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수도 파리권역의 과잉집중 방지 및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수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지방분산 계획을 준비하였으며 1990년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배준구, 2006).<sup>5)</sup> 즉, 1991년부터 2003년까지 7차례에 걸쳐 4만 2,600명 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방분산 정책은 파리 인구 집중 억제, 파리와 지방 간 소득 격차 축소, 파리의 고등교육 정원 비중 감소, 지방도시의 특성화 제고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배준구, 2006).

아일랜드 또한 2003년 수도 더블린의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Public Service Decentralisation Programme)을 수립하여 약 1만

---

5) 1955년 지방이전 계획 마련 이후 1960년대에도 다수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둔화, 고용감소 등 경제적 상황 악화로 지방이전 정책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기도 하였다(배준구, 2006).



3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25개 카운티로 이전한 바 있다. 아일랜드 서부 개발위원회(Western Development Commission, 2008)는 2008년 아일랜드 정부 부서인 사회·가족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 DSFA)의 직원 116명과 공동체·농촌·게일터흐트부(Department of Community, Rural and Gaeltacht Affairs, DCRGA)의 직원 100명이 서부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서부지역에 153.7개의 일자리 및 연간 660만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미래 이전계획 인원을 합쳐 공동체·농촌·게일터흐트부의 직원 164명, 사회·가족부의 직원 220명이 이전하는 경우 248.2개의 일자리와 연간 1,050만유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독일은 통일 이후 1999년 본에서 베를린으로 정부기관을 이전한 사례가 있는데, Faggio et al.(2019)은 공공부문의 고용이 베를린 고용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전하는 경우 우편번호 기준 동일 지역에 55개의 민간 일자리가, 인접 지역에 36개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부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전이 민간부문 일자리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 외에도 Behar and Mok(2019)은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가 민간부문의 고용을 구축(Crowding out)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Jofre-Monseny et al.(2020)은 공공의 고용이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민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Faggio and Overman(2014)은 비교역 분야 산업(건설, 서비스)에서는 민간의 고용이 창출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대로 교역 분야 산업(제조업)에서는 민간의 고용이 위축되는 등 산업 분야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했다. Caponi(2017)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가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하였는데 공공부문의 임금체계가 유연할 경우에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며,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표 III-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해외사례 연구

저자	연구 제목	주요 분석 지표
Marshall et al. (2005)	“Relocation, relocation, relocation: Assessing the case for public sector dispersal”	• 지역 간 GDP 격차, 실업률 및 고용 현황, 교통 혼잡수준 차이 등
배준구 (2006)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 지역별 인구수 현황, 지역별 소득 격차 현황, 교육 정원 현황 등
Western Development Commission (2008)	<i>Moving West</i>	• 연간 신규 일자리 발생 효과, 부가가치 발생 효과 등
Faggio and Overman (2014)	“The effect of public sector employment on local labour markets”	• 전체 고용률, 민간·공공 고용률 및 고용비중, 산업별 고용률 등
Caponi (2017)	“The effects of public sector employment on the economy”	• 전체 고용 현황, 민간·공공 고용 현황, 공공 부문 임금체계 등
Behar and Mok (2019)	“Does public-sector employment fully crowd out private-sector employment?”	• 전체 실업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고용 현황 등
Faggio (2019)	“Relocation of Public Sector Workers: Evaluating a place-based policy”	• 공공·민간 부문 고용자 수, 산업별 고용 현황, 이전 지역 인접성에 따른 고용 현황 차이 등
Faggio et al. (2019)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Evidence from a German government move”	• 베를린 내 지역별, 업종별 고용 현황 등
Jofre-Monseny et al. (2020)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public employment”	• 공공부문 고용비용, 교역 및 비교역 산업별 고용률, 전체 실업률 등

자료: 저자 작성

## 2. 혁신도시 정주여건 연구

앞서 살펴보았던 인구 및 일자리 증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직접 효과라고 한다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2003~2015)』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도교통부, 2016, p. 262). 먼저, 국도교통부는 주기적으로 혁신도시 정주환경과 관련된 통계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혁신도시의 인구 현황 외에도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공급 현황, 교육 및 의료 시설 현황, 문화 및 체육 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다. 최근 자료인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공동주택은 84,328호를 공급하여 2017년 대비 19,222호 증가하였다. 초중고교는 총 48개소, 유치원 42개소, 어린이집 273개소, 편의시설(병의원, 마트 등) 8,0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에는 정주인프라와 창업지원공간으로 기능하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총 11개소의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국도교통부, 2022).

다음으로 권영섭 외(2015)는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혁신도시 10개 지역을 포함한 13개 지역 42개 기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2,097명을 대상으로 일반 현황, 경제적 현황, 이주형태, 정책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 및 비용 감소’, ‘자연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등을 기관 이전 이후 장점이라고 응답했고, ‘의료·문화·복지시설이 좋지 않음’, ‘광역대중교통 불편’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이주 전·후 만족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이주 전 만족도 평균이 4.06점인 반면, 이주 후 만족도 평균은 2.29점에 불과하였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체육·여가활용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기관 이전 이후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민·안형순(2018)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도시의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전반적 만족도 등 정주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주환경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특성(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 등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적 특성(이웃과

의 관계), 시설적 특성(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외(2022)는 공공기관 이전 시 이주형태별(가족동반 이주, 단신 이주, 미혼독신 이주, 출퇴근)로 정주환경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가족동반 이주는 안전·의료시설, 문화·여가시설, 가족 구성원 관련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토지 압축도와 복합도가 높은 경우, 기관의 정착 개월 수가 긴 경우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대로 혁신도시 내 생활시설과의 접근성이 나쁠수록 출퇴근이나 단신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연문화시설과의 접근성과 가족동반 이주 간의 상관도가 가장 높았음을 토대로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문화·여가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윤서·김종진(2016)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혁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자들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적 요인(근교 학교의 존재 여부, 학교 만족도 등), 관리적 요인(주택의 건물관리, 택배관리, 주차관리 등), 경제적 요인(주택임대료의 적정성, 통근거리 등), 공동체의식(이웃과의 친밀성, 사회적 네트워크 존재 여부 등)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주택가격의 안정화, 배후도시와의 접근성 제고, 상업·의료 시설 유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표 III-3〉 혁신도시 정주환경 연구

저자	연구 제목	주요 분석 지표
권영섭 외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 종사자의 이주형태, 경제적 현황, 혁신도시 정책 평가 등
김윤서·김종진 (20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전반적 주거만족도, 각 분야(정주 시설, 경제, 환경, 공동체의식, 접근성 등)별 만족도
백민·안형순 (2018)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 평가 분석」	• 종합 정주환경 만족도, 거주지 물리적 특성, 거주지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

〈표 III-3〉의 계속

저자	연구 제목	주요 분석 지표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 인구 현황, 계획인구 달성률, 평균연령, 정 주시설 공급 현황 등
김현정 외 (2022)	「혁신도시 이주형태와 도시 정주환경과의 상관관계 분석」	• 이주형태, 도시 내 시설 접근성, 혁신도시 토지 이용 현황 등

자료: 저자 작성

### 3. 소결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지역경제 측면에서 인구 및 일자리 증대에 주목한 연구들과 지역환경 측면에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주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획했던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인구 증가율이나 일자리 증가율 및 채용률, GRDP, 지방세 등의 변수들을 주로 다룬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일정 수준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갈수록 그 효과는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파악한 연구는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들은 주로 혁신도시 내 시설 및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면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인구 및 일자리 증대를,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주민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인식 및 평가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 역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있다(국토교통부, 2016). 따라서 현재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만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면, 주민의 지역 내 지속거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 IV. 연구설계

---

### 1. 연구 대상 선정

#### 가. 지역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혁신도시는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되었다. 혁신도시의 입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지역은 한 기초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읍면동 또는 행정구)에 위치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이나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에 입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이전 인원의 정주여건을 조성한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남창우 외, 2020).

물론 보다 정확하게는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읍면동 지역이 그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가 가장 클 수 있다. 그러나 이전 효과가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접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구를 포함한 시·군·구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완주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주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전 규모가 크지 않고, 전북 완주군은 지리적 특성상 자료 수집 과정에 혁신지구와 관련성이 낮은 표본이 다수 수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9개 혁신도시 및 이에 속해 있는 12개 시·군·구가 될 것이다.

## 나. 대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최소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세 미만의 경우 거주 및 이주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sup>6)</sup> 만약 이들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정책 평가에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sup>7)</sup> 예를 들어, 이전기관 종사자 중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이전 공공기관 종사와 무관한 20세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자 한다.

〈표 IV-1〉 혁신도시 인구 현황

(단위: 명, %)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부산	영도구	10,524	9,956	14,037	17,892	44,353	96,762
	남구	33,019	26,606	38,943	41,442	78,915	218,925
	해운대구	43,271	42,891	61,595	68,062	109,778	325,597
	합계	86,814 (13.5)	79,453 (12.4)	114,575 (17.9)	127,396 (19.9)	233,046 (36.3)	641,284 (100.0)

- 6)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진행 시 선정질문을 통해 구분하도록 한다.
- 7) 연구 대상에 대한 정교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 거주인구에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이들의 가족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령별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들이 지역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문운상(2021)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수가 지역별 거주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 0.5%, 대구 1.3%, 광주·전남 7.8%, 울산 2.1%, 강원 2.4%, 충북 2.0%, 전북 0.9%, 경북 4.6%, 경남 1.5%, 제주 0.5%이다.



〈표 IV-1〉의 계속

(단위: 명, %)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대구	동구	38,455 (13.2)	42,651 (14.7)	50,368 (17.3)	56,002 (19.3)	103,190 (35.5)	290,666 (100.0)
광주 전남	나주시	11,613 (11.9)	14,003 (14.4)	16,935 (17.4)	17,497 (18.0)	37,308 (38.3)	97,356 (100.0)
울산	중구	23,086 (13.2)	23,751 (13.6)	32,167 (18.4)	39,041 (22.3)	56,930 (32.5)	174,975 (100.0)
강원	원주시	43,982 (14.7)	45,454 (15.2)	56,740 (19.0)	61,580 (20.6)	91,418 (30.6)	299,174 (100.0)
충북	진천군	9,094	11,175	14,238	13,994	22,212	70,713
	음성군	8,770	8,924	13,184	17,192	31,711	79,781
	합계	17,864 (11.9)	20,099 (13.4)	27,422 (18.2)	31,186 (20.7)	53,923 (35.8)	150,494 (100.0)
전북	전주시	88,909 (16.6)	79,049 (14.8)	102,956 (19.3)	107,930 (20.2)	155,578 (29.1)	534,422 (100.0)
경북	김천시	13,284 (11.3)	14,095 (12.0)	19,001 (16.1)	23,274 (19.8)	48,031 (40.8)	117,685 (100.0)
경남	진주시	42,465 (14.9)	39,634 (13.9)	52,242 (18.4)	56,956 (20.0)	93,044 (32.7)	284,341 (100.0)
합계		366,472 (14.1)	358,189 (13.8)	472,406 (18.2)	520,862 (20.1)	872,468 (33.7)	2,590,397 (10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년 기준)」, <https://jumin.mois.go.kr>, 검색일자: 2023. 2. 28.

## 2. 자료 수집

### 가.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표본 설계를 진행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 1,500명을 9개 혁신도시에 지역별로 166~167명씩 임의할당하였다. 만약 전체 표본을 지역별 인구 비중에 따라 그대로 할당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부산 혁신

도시(영도구, 남구, 해운대구)는 64만명인 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는 9만 7,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응답 결과에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의 응답 특성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표본설계 방식은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전체 응답에 특정 지역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어 발생할 수 있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경영·정문기, 2021). 다음으로 임의할당한 지역별 표본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인구의 연령 비율을 적용하였다(〈표 IV-1〉 참고). 구체적으로 20대 이상부터 10세 단위로 구분하였고, 60세 이상은 통합하여 표본설계를 진행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시 임의 할당과 연령별 층화표본할당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분석을 위한 지역별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표본의 대표성을 일정 부분 고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한 표본설계(안)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표본설계(안)

(단위: 명, %)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부산 혁신도시	22 (13.2)	21 (12.6)	31 (18.6)	33 (19.8)	60 (35.9)	167 (100.0)
대구 혁신도시	22 (13.2)	25 (15.0)	30 (18.0)	32 (19.2)	58 (34.7)	167 (100.0)
광주·전남 혁신도시	22 (13.2)	27 (16.2)	30 (18.0)	30 (18.0)	58 (34.7)	167 (100.0)
울산 혁신도시	20 (12.0)	23 (13.8)	33 (19.8)	37 (22.2)	54 (32.3)	167 (100.0)
강원 혁신도시	24 (14.5)	26 (15.7)	32 (19.3)	34 (20.5)	50 (30.1)	166 (100.0)
충북 혁신도시	20 (12.0)	23 (13.8)	31 (18.6)	34 (20.4)	59 (35.3)	167 (100.0)
전북 혁신도시	27 (16.2)	26 (15.6)	33 (19.8)	33 (19.8)	48 (28.7)	167 (100.0)
경북 혁신도시	19 (11.4)	20 (12.0)	28 (16.9)	33 (19.9)	66 (39.8)	166 (100.0)

〈표 IV-2〉의 계속

(단위: 명, %)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경남 혁신도시	25 (15.1)	23 (13.9)	31 (18.7)	33 (19.9)	54 (32.5)	166 (100.0)
합계	201 (13.4)	214 (14.3)	279 (18.6)	299 (19.9)	507 (33.8)	1,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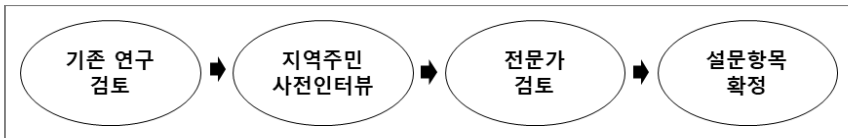
주: ( ) 안은 비중

자료: 저자 작성

#### 나. 설문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를 설문항목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설문항목에 반영할 사항은 없는지 파악하였다. 끝으로 작성된 설문항목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분석 방향을 고려했을 때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은 없는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그림 IV-1〕 설문항목 도출 과정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사전인터뷰 시에는 ① 해당 지역이 처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기대했던 부분 ②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만족스러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물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인터뷰 진행 시 활용하였던 질문지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설문항목 도출을 위한 지역주민 사전인터뷰 질문지

구분	내용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li> <li>• 현재 지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연도</li> </ul>
세부 질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보도자료 등)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었는지</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예: 주거환경 개선, 지역 내 일자리 증가 등</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예: 읍/면/동까지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시/도 단위인지 등</li> </ul>
Wrap-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시 고려사항</li> </ul>

자료: 저자 작성

설문항목 도출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전인터뷰는 총 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터뷰 결과는 〈표 IV-4〉와 같다. 먼저 이전 대상 지역 선정 발표 시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을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지역의 인지도 상승이나 취업 기회의 확대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 후에는 생활 편의시설 등 인프라 개선, 지역 특화산업 발전,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변시설들의 신설 및 교통편 개선이 가장 체감되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골지역 한계상 시내나 주변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현재는 주변 지역까지 연결되는 교통편이 그래도 좀 늘어나서 만족스럽다.”(응답자 C, 전남 나주 거주)

반면에 기관 이전 후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설의 미흡이나 가족동반 이주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주민들이 만족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은 추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령, 응답자 B는 현재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 이전 후에도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전남 나주에 거

주하는 응답자 C나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응답자 D는 기관 이전으로 정주 환경이나 인프라, 교통편의성 등이 개선되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가 상승은 있었지만, 주거 수준 및 생활환경 자체가 유의미하게 바뀌지는 않았다.”  
(응답자 B, 부산 남구 거주)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한 거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범위는 기관이 입지해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정도이며, 광역 차원까지 그 효과가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총무공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근 읍면동에도 새로 조성된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 다만 현재는 경남 전체로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응답자 D, 경남 진주 거주)

끝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에는 대상 지역 내에서도 기관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역기반 시설들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V-4〉 지역주민 사전인터뷰 결과

구분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의 발전</li> <li>• 조세 부담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지역 발전 및 지가 상승</li> <li>• 지역 인지도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반 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발전</li> <li>• 취업기회 확대</li> <li>• 새로운 주민과의 만남</li> <li>•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li> </ul>

〈표 IV-4〉의 계속

구분	응답자 A	응답자 B	응답자 C	응답자 D
기관 이전 후 만족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관리 등 생활 인프라 개선</li> <li>• 행정서비스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가, 주택가격의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편의 확대</li> <li>• 생활 편의시설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 개선</li> <li>• 특화 산업 분야 발전</li> <li>• 일자리 증대</li> </ul>
기관 이전 후 아쉬운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 커뮤니티 건설 미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보다 지역의 발전 속도가 느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동반 이주율 저조</li> </ul>
정책의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에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함</li> <li>• 외부 용역 확대 등 주민 일자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적이지 못함</li> <li>• 그러나 지방 낙후를 막는 의미에서 시도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 등 지역발전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인구분산 효과가 있었으나 갈수록 감소</li> <li>• 직간접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기여</li> </ul>
정책 효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공공기관들 특성에 따라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지역도 효과는 미미</li> <li>• 관광명소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광역 차원 확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이 위치한 지역 및 인접 지역 정도</li> <li>• 광역 차원으로는 확대되지 않음</li> </ul>
추가 공공기관 이전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성이 많은 기관들이 함께 이전해야 지방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전체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민 필요</li> <li>• 지역 기반 시설들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에서 기관의 분산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관과 유사하거나 협업 가능한 기관의 이전 추진</li> <li>• 효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li> </ul>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사전인터뷰에 기초하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로서 인구 및 일자리 증대뿐 아니라 교통 및 편의 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의 개선까지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한 합의와도 유사하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가령, 일정 수준 이상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예: 광역시) 기관 이전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

해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예: 비광역시)의 주민들은 그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한편,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완성된 설문항목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설문의 목적, 설문항목 구성의 방향성, 설문 결과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설문의 목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계량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설문항목 구성의 방향성이다.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면 설문항목 역시 주민의 인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 내 상업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면, 세부적인 상업시설의 개별 종류를 모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계량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셋째, 설문 결과의 활용이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설문조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해당 자료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혁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을 크게는 광역시와 비광역시로 구분할 수 있고, 두 지역 간에는 지역경제나 정주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5〉 설문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구분	내용
설문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구에 대한 한계 보완</li> <li>-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계량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경우는 전무하였음</li> </ul>
설문 구성의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항목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구성</li> <li>- 주민들의 인식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최대한 상세하게 구성</li> <li>- 이는 계량 데이터로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임</li> </ul>
설문 결과의 활용	다양한 측면에서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설문항목은 〈표 IV-6〉과 같다. 크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인식,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추가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결혼 여부,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거주기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후 거주 여부, 원주민-이주민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으로 정책의 직접적 기대 효과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의 거주인구 증가에 기여하였는지, 지역의 일자리 증대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물었다.

셋째, 정주여건의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우선 정주여건을 크게 ① 주택 및 주거환경 ② 상업시설 ③ 문화체육시설 ④ 보육 및 교육 시설 ⑤ 복지시설 ⑥ 의료시설 ⑦ 교통시설 ⑧ 일자리 여건 ⑨ 지역 환경 ⑩ 지역 안전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범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준의 만족도와 중요도, 세부 항목별 만족도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이때, 문항 배치 순서는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묻고 이어 전반적 만족도를 물었다. 이는 응답자 간에 일관된 기준으로 응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개인마다 상업시설의 범위를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려한 상업시설의 세부 항목들을 먼저 제시하면 응답시 일관된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넷째, 현재 거주지역(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즉 주민들의 정주의사에 대해 물었다.

다섯째, 지역 내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들,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개방형 질문으로 물었다.

한편,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한 것은 중간편향적인 응답행태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응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장덕현·조성겸(2017) 역시 중간점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이를 제시했을 때보다 결과가 덜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표 IV-6〉 설문항목

구분		설문항목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 질문) 공공기관 종사 여부</li> <li>• 성별 · 연령 · 학력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 · 직업 · 결혼 여부</li> <li>• 거주지역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li> <li>•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li> <li>• 해당 지역 거주기간</li> <li>• 지방이전 이전 · 이후 거주 여부</li> <li>• (이주민) 이전 거주지역</li> </ul>	
		인구 및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도</li> <li>• 지역 일자리 증대에 대한 기여도</li> </ul>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정주여건	주택 및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공급량, 질, 기반시설)</li> <li>- 아파트(공급량, 질, 기반시설)</li> <li>- 원룸 · 오피스텔(공급량, 질, 기반시설)</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상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마켓 · 식료품점</li> <li>- 편의점</li> <li>- 대형마트</li> <li>- 백화점</li> <li>- 전통시장</li> <li>- 식당, 음식점</li> <li>- 찻집, 카페 등</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문화 ·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li> <li>- 공연/전시장(문예회관, 미술관 등)</li> <li>- 휴양지 및 관광지</li> <li>- (공공) 도서관</li> <li>- 실내 체육관</li> <li>- 실외 운동장</li> <li>- 녹지 공간 및 공원 등</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표 IV-6〉의 계속

구분		설문항목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정주여건	교육·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li> <li>- 초등학교</li> <li>- 중·고등학교</li> <li>- 학원 및 독서실</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병원·종합병원</li> <li>- 동네 의원</li> <li>- 치과 병·의원</li> <li>- 한의원(한방 병원)</li> <li>- 약국(한약국 포함)</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마을버스</li> <li>- 택시</li> <li>- 자전거</li> <li>- 보행로</li> <li>- 시외·고속버스</li> <li>- 기차</li> <li>- (고속)도로 접근성</li> <li>- 주차장</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일자리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제공의 충분성</li> <li>- 정규직 일자리 증가</li> <li>- 전문직·관리직 일자리 증가</li> <li>- 고부가가치 산업(R&amp;D 등) 비중 증가</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지역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미세먼지, 악취 등)</li> <li>- 수질(하천, 지천 등)</li> <li>- 토양(쓰레기, 농약 등에 의한 토양오염)</li> <li>- 소음 및 진동(교통소음, 건설소음 등)</li> <li>- 녹지환경(자연경관 등)</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지역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관리</li> <li>- 건축물, 시설물(주택, 교량 등) 유지 보수</li> <li>- 교통사고 처리 및 대응</li> <li>- 범죄 예방, 치안 관리</li> <li>- 화재(산불 포함) 대응</li> <li>- 응급의료시스템</li> </ul> </li> <li>• 전반적 만족도 및 중요도</li> </ul>

〈표 IV-6〉의 계속

구분	설문항목
정주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구)에서 지속 거주할 의향</li> </ul>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li> <li>•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li> <li>•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경험 및 참여도(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만족도)</li> </ul>
기타 (개방형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li> <li>•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고려사항</li> </ul>

자료: 저자 작성

#### 다. 설문조사 실시

앞서 설계가 완료된 설문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조사와 달리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을 도와주는 면접원이 없다. 따라서 일부 불성실한 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 소요 시간을 검토하고, 교차문항 검증을 통해 오류 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배성민(2012)은 면접원이 함께 있는 오프라인 조사의 경우 긍정 편향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나, 온라인 조사는 면접원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조사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선정질문을 통해 거주지 및 공공기관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들에게 조사 참여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어 거주 시군구 및 연령 등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할당된 표본수에 기초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였다.

또 설문진행 시에는 대상자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정주여건의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 시, 지역적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한 것만 응답해야 하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등을 해당 설문 앞에 반복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 〈표 IV-7〉 설문 응답 가이드

※ 응답 시 고려사항: 아래 각각의 정주여건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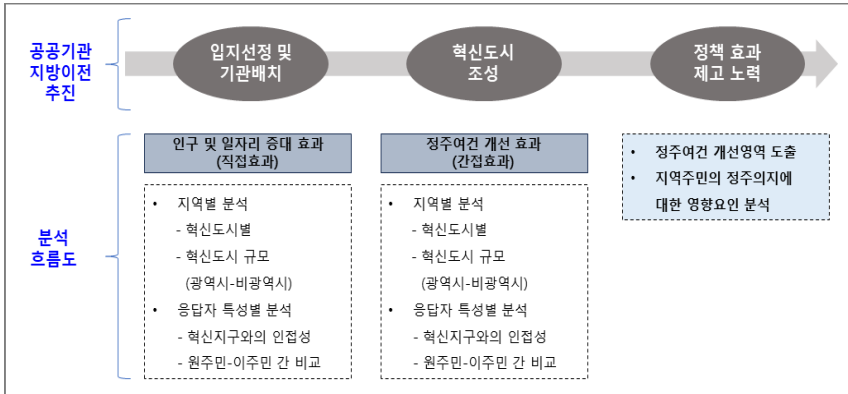
- ①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경남 진주시 거주): 경남 진주시 내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응답
- ② 개별 시설에 대해 양과 질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양적 측면): 지역 내 백화점이 없어 불편하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고려하여 응답
  - 예시(질적 측면): 시설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고려하여 응답
- ③ 본인이 이용경험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이용경험 없음): 응답자 본인이 미혼이라 교육시설에 대해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응답

자료: 저자 작성

### 3.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및 사전인터뷰 등에 기초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는 크게 직접적 기대 효과와 간접적 기대 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가, 후자에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포함될 수 있다(권영섭 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① 인구 및 일자리 증대 ② 정주여건 개선 등의 두 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그림 IV-2] 분석의 틀



자료: 저자 작성

전체적인 분석의 흐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 과정에 기초한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 내 기관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선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를 조성한다. 이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는 혁신도시의 실제 인구 및 일자리 통계 현황 등과 주민의 체감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효과 인식은 입지 선정 후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지방이전 대상지역 입지 선정 시, 또 입지 선정 후 혁신도시 조성 시 등 각각의 시점에 대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영역을 도출하였고, 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각 단계별 세부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지

방이전의 효과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세부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규모<sup>8)</sup>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규모는 해당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로 판단하였다. 즉,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광역시’로, 그 외 지역은 ‘비광역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속한 주민들 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검증방법은 T-검정을 적용하였다.

둘째, 응답자 특성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지 수준이 혁신지구와의 인접성, 원주민-이주민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으며, T-검정과 ANOVA 검정을 적용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이나 혁신도시 내에서의 기관 배치 등과 관련해 주민의 인지 현황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각의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면,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은 혁신지구 내 거주 여부 및 응답자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혁신지구 내 거주’한다고 한 경우는 ‘인접성 높음’으로 구분하였고, 앞서 혁신지구 내 거주한다는 응답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나, ‘혁신지구 외 거주’한다고 한 경우는 ‘인접성 중간’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는 모두 ‘인접성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원주민-이주민의 구분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거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거주하였다는 응답자는 ‘원주민’으로, 기관 이전 후부터 거주하였다는 응답자는 ‘이주민’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

8)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혁신도시 규모’, 즉 광역시와 비광역시에 대해 혁신도시 자체의 규모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혁신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규모임을 재차 밝혀둔다.

〈표 IV-8〉 응답자 구분

특성	응답자 구분
혁신지구와의 인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A: 혁신지구 내 및 반여 1동 거주 → 인접성 높음</li> <li>• 응답자 B: 혁신지구 외 및 반여 1동 거주 → 인접성 중간</li> <li>• 응답자 C: 그 외 → 인접성 낮음</li> </ul>
원주민-이주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부터 거주 → 원주민</li> <li>• 공공기관 이전 후부터 거주 → 이주민</li> </ul>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개선영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주여건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를 분석하여(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넷째,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이 광역시-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만약 주민의 정주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영향요인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거주지역(시군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개별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 밖에 성별, 연령, 원주민 여부, 월평균가구 소득, 가구원 수, 자가소유 여부, 혁신도시 규모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hat{y} = \alph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z + e \quad \text{식 (1)}$$

$\hat{y}$ : 정주의지

$\alpha$ : 상수항

$b_1 \sim b_{10}$ : 정주여건

$z$ : 인구통계 변수

$e$ : 잔차

---

## V. 실증분석

---

### 1. 혁신도시의 기초 현황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산업, 정주환경에 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 현황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의 전체 인구수 및 연령별 인구수를 수집하였고, 세대 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시군구별 세대 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에서 각 시군구별 순이동 인구수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산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해당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전국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로 사업체의 구조와 고용의 수·형태에 대해 조사한다(남창우 외, 2020).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소재 지역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입 및 세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자료의 구축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및 산업 동향과 관련해서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되었기에 본 연구의 계량자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자 하였다. 인구 관련 자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산업 및 정주여건에 관련된 자료는 각 자료별로 수집 및 공개 시기에 차이가 있어, 2023년 9월 말일 기준 공개된 자료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현황을 파악할 단위는 혁신도시가 포함된 시·



군이 주된 대상이다. 분석기간 중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는 2021년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명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는 2014년 청원군과 통합되며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통합 청주시의 출범에 따라 2014년 이전 청원군에 대한 자료는 모두 청주시 자료로 처리하였다.

〈표 V-1〉 통계자료 항목 및 자료 출처<sup>9)</sup>

구분	내용	출처
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별 인구 변화(2005~2022년)</li> <li>• 혁신도시별 생산가능 인구 변화(2005~2022년)</li> <li>• 혁신도시별 세대 수 변화(2005~2022년)</li> <li>• 혁신도시별 순이동인구(2005~2022년)</li> <li>• 전출지 · 전입지별 이동인구(2005~2022년)</li> </ul>	주민등록인구통계 <sup>1),2)</sup> 국내인구이동통계
산업 현황	• 혁신도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2005~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재정 현황 <sup>3)</sup>	• 혁신도시별 세입 · 세출 변화(2005~2022년)	지방재정연감

주: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경우 2008년부터 시군구 · 성 · 연령별 인구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 2005~2007년 사이의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함

2) 본 자료는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연앙인구는 평균인구의 개념(1월 1일 인구와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이기에 0.5명으로 평균이 도출되는 사례들이 존재

3) 재정 현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계, 결산자료를 이용함. 세출 자료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함

자료: 저자 작성

실증분석의 대상인 혁신도시는 총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 혁신도시(영도구 · 남구 · 해운대구), 대구 혁신도시(동구), 울산 혁신도시(중구), 강원 혁신도시(원주시), 충북 혁신도시(진천군 · 음성군), 전북 혁신도시(전주시), 광주 · 전남 혁신도시(나주시), 경북 혁신도시(김천시), 경남 혁신도시(진주시)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주 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 및 이전규모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작은 사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전라북도의 전주시, 완주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나,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완주군을 제외하는 것이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본 연구에서 ‘혁신도시별’ 통계 현황은 ‘혁신도시 소재 시 · 군별’ 통계 현황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한편, 인구 및 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할 때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을 비교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는데, 혁신도시의 건립 목적상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변화와 비교하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표 중 하나가 인구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혁신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 비교 분석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만을 비교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과 혁신도시를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대조군을 더 좁게 설정함으로써 보다 정치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료는 혁신도시 외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도 자치단체와 서울, 세종,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개별이전으로 공공일자리가 이전한 지역인 충청북도 청주와 경상북도 경주 지역도 비수도권 지역 대상 자료 수집 시 제외하였다.

## 가. 혁신도시 인구 현황

### 1) 혁신도시 인구 및 세대 수 변화

혁신도시가 설치된 10개 광역자치단체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인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1]과 같다. 2005년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이하 혁신도시)의 인구수는 총 308만 4,181명이며, 2022년 혁신도시의 인구수는 총 308만 9,005명으로 약 17년 동안 혁신도시의 총인구수는 0.2%(4,8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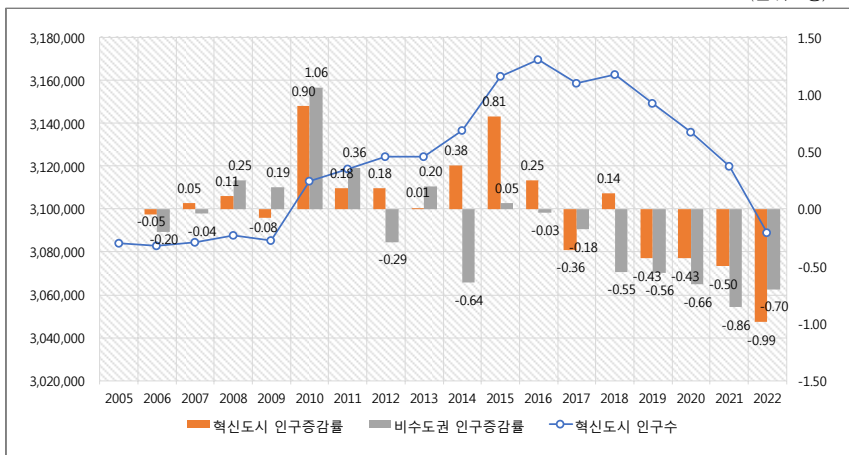
혁신도시의 인구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혁신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5~2008년까지는 평균적으로 0.03% 수준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는 2005~2009년 대비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사이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시작하여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17년 잠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7~2018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0.6%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 혁신도시 인구수 및 증가율 변화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각 연도별 혁신도시의 인구증감률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감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혁신도시와 비수도권에서 인구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혁신도시와 비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혁신도시별 인구수 및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표 V-2>와 같다. 광역시에 소재한 부산, 대구, 울산과 도에 소재한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이전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도 단위에 소재한 모든 혁신도시에서 인구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광역시 단위에 소재한 혁신도시에서만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표 V-2〉 혁신도시별 인구수 변화

(단위: 명, %)

혁신도시 <sup>1)</sup>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증가율	2012~ 2022년 증가율	2005~ 2022년 증가율
부산 혁신도시	871,892	859,128	751,274	-1.5	-12.6	-13.8
대구 혁신도시	344,205	342,092	339,530	-0.6	-0.8	-1.4
울산 혁신도시	235,325	233,013	208,132	-1.0	-10.7	-11.6
강원 혁신도시	286,541	323,885	360,807	13.0	11.4	25.9
충북 혁신도시	146,055	156,438	178,205	7.1	13.9	22.0
전북 혁신도시	622,111	648,863	651,495	4.3	0.4	4.7
광주·전남 혁신도시	98,644	88,067	116,456	-10.7	32.2	18.1
경북 혁신도시	142,580	135,504	139,324	-5.0	2.8	-2.3
경남 혁신도시	336,830	337,314	343,782	0.1	1.9	2.1
혁신도시 총합	3,084,181	3,124,304	3,089,005	1.3	-1.1	0.2
비수도권 총합	19,703,444	19,964,850	19,194,330	1.3	-4.1	-2.6

주: 1) 광역자치체의 통계치는 혁신도시가 조성된 시군구만 포함한다(이하 동일). 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동구),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충북(진천군·음성군), 전북(전주시·완주군), 광주·전남(나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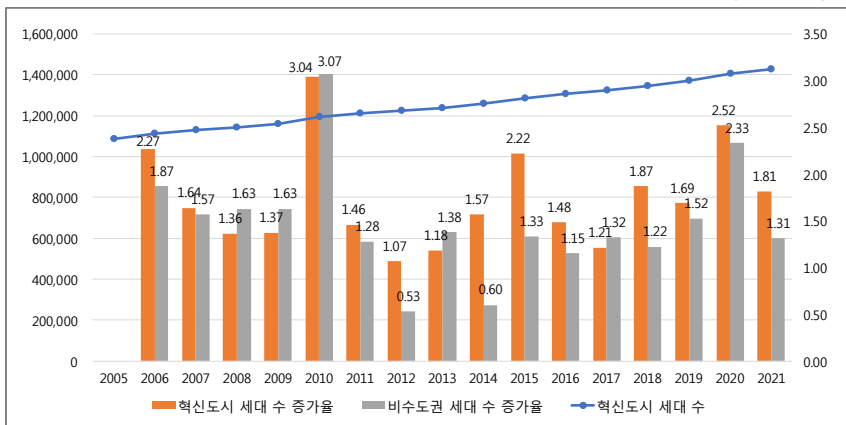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 혁신도시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2022년 사이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로 나타났고, 부산 지역은 2005~2012년 변화와 동일하게 모든 혁신도시의 소재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도시의 총세대 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2]와 같다. 2005년 혁신도시의 세대 수는 총 108만 5,370세대이며, 2022년 혁신도시의 세대 수는 총 143만 8,271세대로 2005~2022년 사이 혁신도시의 총세대 수는 32.5%(35만 2,901세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의 총세대 수는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의 세대 수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의 세대 수 증가율보다 4.7%p 높게 나타났다.

[그림 V-2] 혁신도시 세대 수 및 증가율 변화

(단위: 세대,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혁신도시의 세대 수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혁신도시의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혁신도시의 세대 수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의 세대 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혁신도시별 세대 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혁신도시에서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05~2022년 사이 세대 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65.0%)로 나타났고, 2위는 강원 혁신도시(61.1%)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 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13.9%)와 울산 혁신도시(14.9%)로 집계되었다.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시기가 2012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의 세대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충북 혁신도시(36.6%)의 세대 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혁신도시(3.3%)의 세대 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표 V-3〉 혁신도시별 세대 수 변화

(단위: 세대, %)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증가율	2012~ 2022년 증가율	2005~ 2022년 증가율
부산 혁신도시	300,723	331,350	342,378	10.2	3.3	13.9
대구 혁신도시	123,369	136,479	159,422	10.6	16.8	29.2
울산 혁신도시	81,017	87,944	93,055	8.6	5.8	14.9
강원 혁신도시	104,779	130,617	168,755	24.7	29.2	61.1
충북 혁신도시	54,981	66,409	90,690	20.8	36.6	65.0
전북 혁신도시	209,069	244,811	296,241	17.1	21.0	41.7
광주·전남 혁신도시	40,898	40,841	59,865	-0.1	46.6	46.4
경북 혁신도시	51,244	55,964	69,038	9.2	23.4	34.7
경남 혁신도시	119,290	130,438	158,827	9.4	21.8	33.1
혁신도시 총합	1,085,370	1,224,853	1,438,271	12.9	17.4	32.5
비수도권 총합	7,138,348	8,006,171	9,118,229	12.2	13.7	27.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인구수 변화 및 세대 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혁신도시 전체의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세대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즉, 기존 세대의 세대분할이 이루어져 분리한 세대가 외부 지역으로 전출하고, 3~4인 가족 단위의 세대가 지역 외부로 전출하는 한편, 1~2인 가구 단위가 지역 내로 전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혁신도시 인구 변화의 연령적 특성

혁신도시의 인구수는 모든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혁신도시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전체 인구 대비 만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를 비롯하여 성장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공급을 비롯하여 구매 및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005년 기준 혁신도시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72.0%이며, 2022년에는 68.8%로 변화하였다. 즉,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혁신도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3.2%p 감소하였다. 이는 비수도권 전체의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2.6%p 감소한 것보다 0.6%p 더 감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V-4〉 혁신도시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

(단위: %, %p)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부산 혁신도시	74.8	74.1	67.7	-0.6	-6.5	-7.1
대구 혁신도시	73.7	73.2	67.8	-0.4	-5.4	-5.8
울산 혁신도시	74.5	77.3	70.8	2.8	-6.5	-3.8
강원 혁신도시	69.8	72.1	71.0	2.3	-1.2	1.1
충북 혁신도시	66.9	69.1	67.9	2.2	-1.2	1.0
전북 혁신도시	70.7	72.7	70.9	2.0	-1.8	0.2
광주·전남 혁신도시	65.7	64.3	63.9	-1.4	-0.5	-1.9
경북 혁신도시	68.3	68.4	64.0	0.04	-4.3	-4.3
경남 혁신도시	71.3	72.1	69.0	0.8	-3.1	-2.3
혁신도시 종합	72.0	72.7	68.8	0.8	-3.9	-3.2
비수도권 종합	70.5	71.4	67.9	1.0	-3.6	-2.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이며 2005년 생산가능인구의 22.0%가 감소하였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 혁신도시로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생산가능인구는 28.0% 증가하였고,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1.1%p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 혁신도시이며(-6.5%p),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광주·전남 혁신도시(-0.1%p)로 나타났다.

한편, 혁신도시 내 만 19세 이하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표 V-5>와 같다. 2005년 기준 전체 혁신도시의 만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25.6%이며, 2022년에는 16.1%로 변화하였다. 즉,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혁신도시의 만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9.4%p 감소하였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체의 만 19세 이하 인구 비중의 감소보다는 적게 나타났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9.6%p 감소하여 혁신도시보다 0.2%p 더 큰 감소 폭이 나타났다.

<표 V-5> 혁신도시 만 19세 이하 인구 비중 변화

(단위: %, %p)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부산 혁신도시	23.7	19.9	14.6	-3.8	-5.8	-9.0
대구 혁신도시	23.3	19.3	14.4	-3.9	-5.4	-8.9
울산 혁신도시	27.3	22.0	15.9	-5.3	-6.8	-11.3
강원 혁신도시	27.4	23.6	17.1	-3.8	-7.3	-10.3
충북 혁신도시	25.1	20.9	15.6	-4.2	-5.9	-9.6
전북 혁신도시	29.0	25.0	18.0	-4.0	-7.7	-11.0
광주·전남 혁신도시	20.5	16.6	16.4	-3.9	-0.6	-4.1
경북 혁신도시	23.1	19.2	15.5	-3.9	-4.2	-7.5
경남 혁신도시	26.5	23.1	17.3	-3.5	-6.3	-9.2
혁신도시 총합	25.6	21.7	16.1	-3.9	-6.1	-9.4
비수도권 총합	25.3	21.6	15.8	-3.7	-6.4	-9.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만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 변화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만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



혁신도시이며(-10.3%p), 가장 적게 감소한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4.1%p)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의 만 19세 이하 인구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이며(-7.7%p), 반대로 광주·전남 혁신도시(-0.6%p)가 가장 적은 규모로 감소하였다.

한편, 노령인구(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표 V-6〉), 2005년 기준 혁신도시의 노령인구 비중은 9.1%이며, 2022년에는 19.7%로 변화하였다.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혁신도시의 노령인구 비중은 10.6%p 증가하였으며, 해당 수치는 2005년 대비 2022년 노령인구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수도권 전체 노령인구의 비중은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10.2%p 증가하여 20.9%를 기록하였으며, 혁신도시의 노령인구 비중보다 0.4%p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 비중 변화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노령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이며(14.0%p),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전남 혁신도시(4.4%p)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노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이며(9.5%p), 반대로 광주·전남 혁신도시(-0.9%p)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노령인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혁신도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단위: %, %p)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부산 혁신도시	8.1	12.7	22.1	4.6	9.5	14.0
대구 혁신도시	8.9	13.4	21.6	4.5	8.2	12.7
울산 혁신도시	5.5	8.6	17.8	3.2	9.2	12.4
강원 혁신도시	9.5	11.6	16.8	2.2	5.2	7.4
충북 혁신도시	13.6	16.1	20.8	2.5	4.7	7.2

〈표 V-6〉의 계속

(단위: %, %p)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전북 혁신도시	7.7	10.6	16.5	2.9	5.9	8.8
광주·전남 혁신도시	19.2	24.5	23.6	5.3	-0.9	4.4
경북 혁신도시	15.0	18.9	25.0	3.9	6.1	10.0
경남 혁신도시	9.3	12.5	18.7	3.2	6.2	9.4
혁신도시 총합	9.1	12.7	19.7	3.6	7.0	10.6
비수도권 총합	10.7	13.8	20.9	3.1	7.1	1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3) 혁신도시의 인구가동 현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 소재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혁신도시 조성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자 한다. 해당 분석은 소재 지역으로 순이동 인구수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순이동 인구수의 수식은 전입인구-전출인구로 측정하였다(〈표 V-7〉).

〈표 V-7〉 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 현황

(단위: 명)

연도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총합
2005	-6,099	-1,947	-981	2,302	-188	-3,973	-1,166	-1,724	-2,196	-15,972
2006	3,704	-7,403	-1,686	4,495	554	358	-1,411	-1,940	-3,867	-7,196
2007	-2,920	-3,793	336	2,863	1,262	-4,591	-829	-865	-4,239	-12,776
2008	-3,633	-6,468	-4,119	3,695	1,312	4,041	-2,376	-1,355	-700	-9,603
2009	-5,900	-852	-4,898	2,564	552	483	-1,798	-2,289	-654	-12,792
2010	-11,013	1,057	-230	3,100	298	104	-1,277	-642	2	-8,601
2011	-9,923	2,574	-1,231	4,540	1,212	1,330	-1,482	40	-714	-3,654
2012	-6,389	-298	-679	2,123	1,595	110	178	-647	794	-3,213
2013	-7,425	699	777	80	1,503	-1,380	-50	-160	-1,008	-6,964
2014	-11,832	3,128	3,317	1,710	2,291	348	3,150	383	2,325	4,820

〈표 V-7〉의 계속

(단위: 명)

연도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총합
2015	-8,608	627	4,561	4,774	3,779	-3,011	7,566	4,781	3,425	17,894
2016	-11,029	940	-3,077	4,275	3,257	-2,424	6,168	2,145	1,657	1,912
2017	-15,081	-2,227	-4,647	3,087	3,352	-3,882	5,756	866	-258	-13,034
2018	1,313	1,973	-7,050	2,609	3,301	1,498	3,746	-1,473	-723	5,194
2019	-10,628	-5,689	-8,471	4,966	2,263	3,090	998	513	1,463	-11,495
2020	-12,100	-2,875	-5,839	5,161	1,211	3,146	1,232	-199	1,177	-9,086
2021	-8,402	1,142	-3,940	4,202	1,536	884	1,840	462	20	-2,256
2022	-12,691	-136	-4,002	3,967	1,697	-4,156	398	38	-2,235	-17,120
2005~ 2011	-35,784	-16,832	-12,809	23,559	5,002	-2,248	-10,339	-8,775	-12,368	-70,594
2012~ 2022	-102,872	-2,716	-29,050	36,954	25,785	-5,777	30,982	6,709	6,637	-33,348
2005~ 2022	-138,656	-19,548	-41,859	60,513	30,787	-8,025	20,643	-2,066	-5,731	-103,94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혁신도시 전체의 순이동 인구수를 합산하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순이동 인구수는 -10만 3,942명으로 나타나 약 10만이 넘는 인구가 혁신도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순이동 인구수를 합산하면 3만 3,348명이 혁신도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지표들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유출의 폭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수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강원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혁신도시에서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은 현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기에 부산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순유출(-138,656명)이 나타났으며, 강원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순유입(60,513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시행된 2012년

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이동 인구수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부산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순유출(-102,872명)되었고, 강원 혁신도시(30,864명), 충북 혁신도시(25,785명), 광주·전남 혁신도시(30,982명)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전출지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출지: 수도권(A)		순이동 (A-B)	전출지: 비수도권(B)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005	956,720	445,712	-128,809	574,521	838,326
2006	1,052,504	474,740	-111,700	586,440	832,985
2007	1,021,577	495,592	-82,938	578,530	826,304
2008	979,232	484,165	-52,022	536,187	792,567
2009	940,420	481,013	-43,987	525,000	782,539
2010	917,394	476,523	-31,026	507,549	760,827
2011	874,883	488,935	8,450	480,485	760,210
2012	832,023	468,142	-6,900	475,042	737,533
2013	805,516	451,056	4,384	446,672	720,185
2014	797,535	472,772	21,111	451,661	785,828
2015	815,245	483,024	32,950	450,074	803,081
2016	813,976	448,929	863	448,066	742,371
2017	779,529	430,803	-16,006	446,809	753,789
2018	811,797	410,153	-59,797	469,950	737,284
2019	783,504	392,808	-82,741	475,549	733,087
2020	866,732	406,948	-87,775	494,723	765,711
2021	816,715	414,934	-55,697	470,631	744,954
2022	704,922	386,077	-36,643	422,720	659,886
2005~2011	6,742,730	3,346,680	-442,032	3,788,712	5,593,758
2012~2022	8,827,494	4,765,646	-286,251	5,051,897	8,183,709
2005~2022	15,570,224	8,112,326	-728,283	8,840,609	13,777,46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앞선 <표 V-7>의 분석은 혁신도시만의 인구 순유입, 순유출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인구의 전출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즉, 혁신도시가 새로 설립됨으로써 주변 비수도권 인구를 흡수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수도권 인구분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출지 및 전입지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수도권→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비수도권→비수도권 내 이동을 파악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혁신도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설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제주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V-8>의 분석 결과와 같이 수도권에서 전출하는 인구는 비수도권보다는 동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출할 경우, 비수도권보다는 인천·경기 지역으로 전입한 인구가 더 많았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입지별 전출인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1,557만 224명인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811만 2,32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도권에서 전출한 인구는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884만 609명인 반면,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1,377만 7,467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순이동을 계산하면 -728,283을 기록하는데 이 의미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72만 8,283명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도권, 비수도권의 전출인구의 전입지역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보다 더 많은 현상을 나타냈다. 다만, 2017년 이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나. 혁신도시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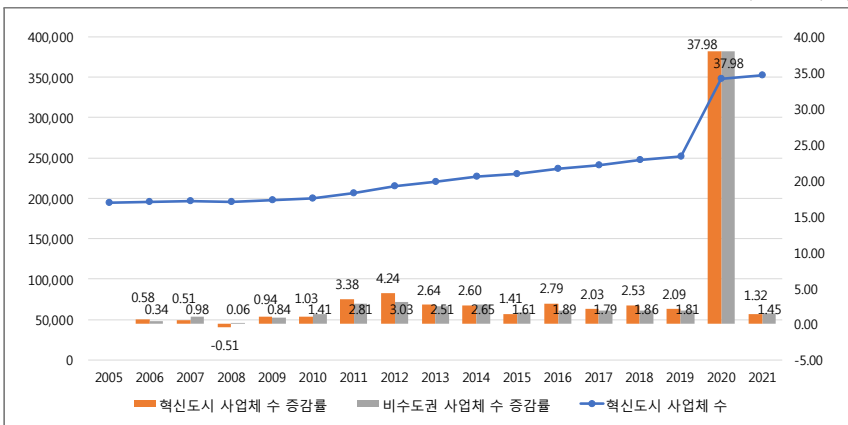
### 1)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사업체 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3]과 같다. 2005년 혁신도시의 총사업체 수는 19만 4,655개이며, 2022년 혁신도시의 총사업체 수는 35만 2,592개로 2005~2022년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는 81.1%(15만 7,93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한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 사업체 수 증가율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 증가율과 비수도권 지역 사업체 수 증가율 모두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2022년부터는 다시 이전의 1~3% 증가율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사업체 수 집계방식에 기인한다. 2020년 이전에는 현장조사에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사업체 수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1인 미디어 및 프리랜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V-3] 혁신도시 사업체 수 및 증가율 변화

(단위: 개,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혁신도시별 사업체 수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혁신도시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V-9〉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 변화

(단위: 개, %)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증가율	2012~ 2022년 증가율	2005~ 2022년 증가율
부산 혁신도시	46,588	48,720	76,752	4.6	57.5	64.8
대구 혁신도시	21,548	22,961	36,892	6.6	60.7	71.2
울산 혁신도시	14,921	14,940	20,436	0.1	36.8	37.0
강원 혁신도시	21,864	25,067	42,783	14.7	70.7	95.7
충북 혁신도시	10,303	12,323	26,674	19.6	116.5	158.9
전북 혁신도시	39,213	49,112	76,227	25.2	55.2	94.4
광주·전남 혁신도시	5,909	5,962	15,459	0.9	159.3	161.6
경북 혁신도시	8,835	9,071	16,101	2.7	77.5	82.2
경남 혁신도시	25,474	26,988	41,268	5.9	52.9	62.0
혁신도시 총합	194,655	215,144	352,592	10.5	63.9	81.1
비수도권 총합	1,348,171	1,480,564	2,383,512	9.8	61.0	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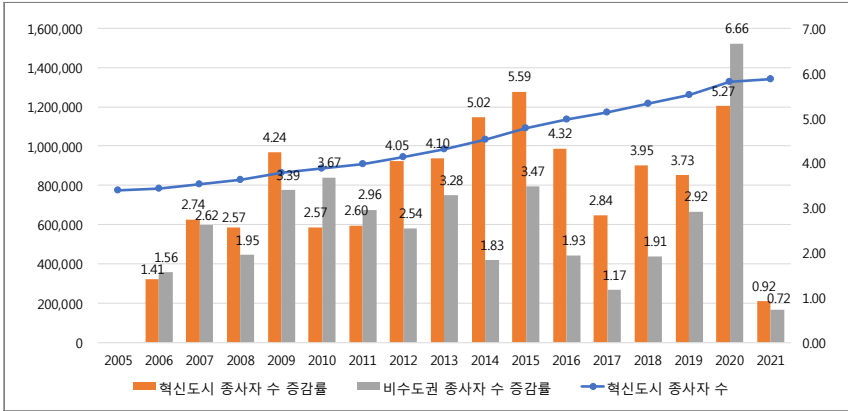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05~2022년 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광주·전남 혁신도시(161.6%)이며,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울산 혁신도시(37.0%)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2022년 사이의 사업체 수 증감률을 살펴봐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업체 수의 증가와 더불어 고용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근로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4]와 같다. 2005년 혁신도시의 총근로자 수는 77만 4,484명이며, 2022년 혁신도시의 총근로자 수는 134만 54명으로 2005~2022년 동안 혁신도시의 총근로자 수는 73.0%(56만 5,5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혁신도시 근로자(종사자) 수 및 증가율 변화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혁신도시의 근로자 수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이후 2019년까지 혁신도시의 근로자 수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 근로자 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근로자 수 증가율이 혁신도시의 근로자 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같은 시기 총사업체 수 증가율과는 다른 추세를 나타내었다. 2022년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근로자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통되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혁신도시별 근로자 수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소재 모든 지역에서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전남 혁신도시(155.8%)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충북 혁신도시(118.6%)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울산 혁신도시(55.1%)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2022년 사이의 종사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전 분석기준과 동일하게 광주·전남 혁신도시(119.5%)가 가장 높은 근로자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전북 혁신도시(27.1%)가 가장 낮은 근로자 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V-10〉 혁신도시의 총종사자(근로자) 수 변화

(단위: 명, %)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부산 혁신도시	182,879	216,189	294,837	18.2	36.4	61.2
대구 혁신도시	79,546	90,794	126,452	14.1	39.3	59.0
울산 혁신도시	40,079	45,999	62,160	14.8	35.1	55.1
강원 혁신도시	87,503	108,748	167,279	24.3	53.8	91.2
충북 혁신도시	66,401	86,601	145,181	30.4	67.6	118.6
전북 혁신도시	160,405	208,877	265,378	30.2	27.1	65.4
광주·전남 혁신도시	24,626	28,696	62,999	16.5	119.5	155.8
경북 혁신도시	36,184	41,330	64,625	14.2	56.4	78.6
경남 혁신도시	96,861	117,475	151,143	21.3	28.7	56.0
혁신도시 총합	774,484	944,709	1,340,054	22.0	41.9	73.0
비수도권 총합	6,022,961	7,241,585	9,157,070	20.2	26.5	52.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sup>10)</sup>는 다른 근로자(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지위에 비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근로자 수 대비 상용근로자 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V-11〉).

2005년 기준 혁신도시의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5.0%이며, 2022년에는 61.2%로 변화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6.2%p 증가하였고, 이는 비수도권 전체의 2005년부터 2022년 사이 상용근로자 비중이 2.6%p 증가한 것보다 3.6%p 더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표 V-11〉 혁신도시의 상용근로자 비중 변화

(단위: %, %p)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부산 혁신도시	52.2	55.4	60.0	3.2	4.7	7.9
대구 혁신도시	53.1	55.1	59.5	2.0	4.4	6.4
울산 혁신도시	44.0	47.3	55.0	3.3	7.6	10.9
강원 혁신도시	56.8	55.1	59.7	-1.8	4.7	2.9
충북 혁신도시	74.4	77.4	76.5	2.9	-0.8	2.1
전북 혁신도시	54.4	53.9	57.6	-0.5	3.7	3.2
광주·전남 혁신도시	60.3	64.6	69.9	4.3	5.3	9.6
경북 혁신도시	58.1	57.7	64.1	-0.4	6.4	6.0
경남 혁신도시	50.3	50.3	56.0	0.02	5.7	5.7
혁신도시 총합	55.0	56.4	61.2	1.3	4.9	6.2
비수도권 총합	59.1	61.2	61.7	2.1	0.5	2.6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 혁신도시이며(10.9%p), 가장 작게 증가한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2.1%p)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의 상용근로자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 혁신도시이며(7.6%p), 오히려 감소한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0.8%p)로 나타났다. 충북 혁신도시는 해당 기간 동안 모든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업, 기관, 정부에서 채용하는 인원과는 별개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유입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총근로자 자료에는 자영업자 또한 포함되므로 총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V-12〉는 혁신도시의 자영업자 비중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기준 혁신도시의 자영업자 비중은 22.2%이며, 2022년에는 21.2%로 1.0%p 감

소하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2005년 19.4%에서 2022년 21.1%로 1.7%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22년 사이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이며(1.8%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 혁신도시(-6.5%p)이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의 상용근로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 분석과 유사하게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이며(3.6%p), 해당 기간 동안 유일하게 울산 혁신도시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p).

〈표 V-12〉 혁신도시의 자영업자 비중 변화

(단위: %, %p)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비중 변화	2012~ 2022년 비중 변화	2005~ 2022년 비중 변화
부산 혁신도시	23.0	19.3	20.7	-3.7	1.5	-2.3
대구 혁신도시	23.9	21.5	24.1	-2.5	2.6	0.2
울산 혁신도시	34.7	29.3	28.2	-5.5	-1.0	-6.5
강원 혁신도시	21.6	19.1	20.8	-2.5	1.6	-0.8
충북 혁신도시	12.2	10.8	13.6	-1.5	2.9	1.4
전북 혁신도시	21.4	19.6	23.2	-1.8	3.6	1.8
광주·전남 혁신도시	20.0	15.7	18.1	-4.3	2.4	-1.9
경북 혁신도시	21.2	18.1	20.0	-3.1	1.9	-1.2
경남 혁신도시	23.5	20.2	23.1	-3.3	3.0	-0.3
혁신도시 총합	22.2	19.2	21.2	-3.0	2.0	-0.9
비수도권 총합	19.4	17.0	21.1	-2.4	4.1	1.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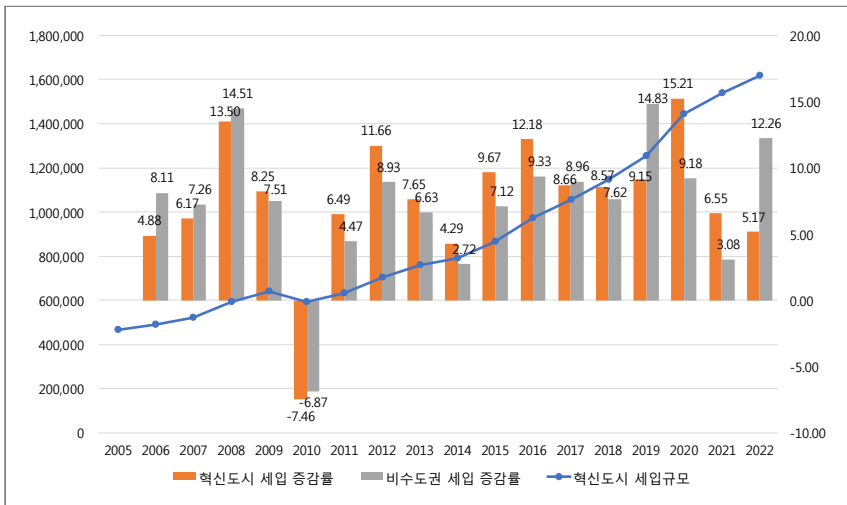
#### 다. 혁신도시 재정 현황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의 세입규모 변화는 [그림 V-5]와 같다.

2005년 혁신도시의 평균 총세입은 약 4,677억 9,900만원이며, 2022년의 경우 약 1조 6,170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 약 17년간 세입규모가 2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총세입규모 변화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걸쳐 총세입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8.98%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2010년 제외)의 연평균 증가율(7.9%)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총세입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부터 대다수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는 혁신도시의 연평균 총세입규모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에서 나타났다.

[그림 V-5] 혁신도시 세입결산(총계) 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각 혁신도시별로 총세입규모 및 증가율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에서 총세입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의 증가율보다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발표된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세입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404.0%)와 울산 혁신도시(403.2%)이며,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기준 총세입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혁신도시로 나타났다. 광역시 소재 혁신도시와 광역도 소재 혁신도시의 세입 규모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증가율은 광역시 소재 혁신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나, 세입 규모 자체는 광역도 소재 혁신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 소재 혁신도시의 경우, 비수도권 평균 세입규모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V-13〉 혁신도시별 세입결산(총계) 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년 증가율	2012~ 2022년 증가율	2005~ 2022년 증가율
부산 혁신도시	154,523	287,004	778,823	85.7	171.4	404.0
대구 혁신도시	210,636	380,290	1,047,632	80.5	175.5	397.4
울산 혁신도시	126,069	269,762	634,401	114.0	135.2	403.2
강원 혁신도시	781,217	979,862	2,326,300	25.4	137.4	197.8
충북 혁신도시	282,117	416,210	1,009,660	47.5	142.6	257.9
전북 혁신도시	1,026,690	1,342,606	3,055,035	30.8	127.6	197.6
광주·전남 혁신도시	473,022	698,733	1,344,453	47.7	92.4	184.2
경북 혁신도시	434,594	855,814	1,799,674	96.9	110.3	314.1
경남 혁신도시	721,321	1,107,938	2,557,746	53.6	130.9	254.6
혁신도시 총합	467,799	704,246	1,617,080	50.5	129.6	245.7
비수도권 총합	326,732	494,233	1,078,469	51.3	118.2	230.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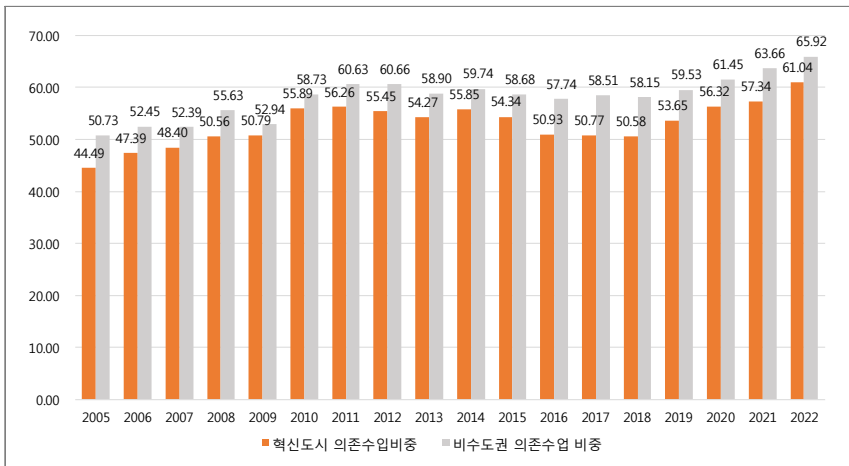
혁신도시의 재정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가 설치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대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혁신도시만의 자체재원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으며 국가 및 광역 단위 지자체의 보조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지에서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의 이전수입 규모 및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그림 V-6>에서 나타나듯, 이전수입 비중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05년 혁신도시의 이전수입 비중은 평균 44.5%를 나타냈고, 2022년에는 61.0%를 기록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혁신도시의 이전수입 비중은 11.0% 증가한 반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을 제외하고 이전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이전수입 비중이 전 기간에 걸쳐 혁신도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V-6] 혁신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의 이전수입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지방재정365,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한편, 이전수입 자체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혁신도시별 이전수입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표 V-14>와 같다.

전반적으로 2005년에서 2022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에서 평균 이전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혁신도시에서 1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부산 혁신도시가 가장 높은 증가율(189.5%)을 기록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은 경북 혁신도시(112.2%)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전수입의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 신도시(469.7%)이며,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22년 기준 이전수입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이며, 그 다음으로 강원 혁신도시가 뒤를 이었다. 또한, 강원 혁신도시는 광역도에 소재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이전수입 규모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혁신도시의 평균 이전수입 규모와 비수도권의 평균 이전수입 규모를 비교할 때, 혁신도시의 평균 이전수입 규모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았으며 단순 이전수입 규모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혁신도시별 이전수입 결산(총계) 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

혁신도시	2005년	2012년	2022년	2005~ 2012 증가율	2012~ 2022 증가율	2005~ 2022 증가율
부산 혁신도시	89,957	177,003	512,501	96.8	189.5	469.7
대구 혁신도시	141,299	263,018	730,702	86.1	177.8	417.1
울산 혁신도시	79,636	178,976	440,735	124.7	146.3	453.4
강원 혁신도시	260,845	501,975	1,392,418	92.4	177.4	433.8
충북 혁신도시	129,804	247,459	578,922	90.6	134.0	346.0
전북 혁신도시	373,317	681,940	1,845,324	82.7	170.6	394.3
광주·전남 혁신도시	251,980	413,773	904,284	64.2	118.6	258.9
경북 혁신도시	239,907	520,023	1,103,595	116.8	112.2	360.0
경남 혁신도시	306,216	530,110	1,374,961	73.1	159.4	349.0
혁신도시 총합	208,107	390,475	987,049	87.6	152.8	374.3
비수도권 총합	165,739	299,805	710,972	80.9	137.1	329.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세입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혁신도시의 총세입 및 이전수입의 평균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높았으나,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가 지역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간 동안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의 이전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 가. 설문응답 개요

#### 1) 응답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체 표본 수는 1,606명이며, 구체적인 지역별·연령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표 V-15>와 같다. 가장 많은 표본이 수집된 지역은 광주·전남(202명)과 전북(202명) 지역이었으며, 이어 부산 지역에서 196명이 수집되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수집된 지역은 경북(13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목표 표본 대비 100%를 초과하여 수집되었다.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족한 것은 온라인 패널의 특성상 고연령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편, 경북 30대에서 목표 대비 가장 많은 표본이 수집되었고(250%), 반면에 경북 60대 이상에 목표 대비 가장 적은 표본이 수집되었다(16.7%).



〈표 V-15〉 설문응답 현황

(단위: 명, %)

지역 <sup>1)</sup>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목표	수집	목표	수집	목표	수집	목표	수집	목표	수집	목표	수집
부산	22	28 (127.3)	21	25 (119.0)	31	39 (125.8)	33	41 (124.2)	60	63 (105.0)	167	196 (117.4)
대구	22	30 (136.4)	25	37 (148.0)	30	43 (143.3)	32	43 (134.4)	58	24 (41.4)	167	177 (106.0)
광주 전남	22	26 (118.2)	27	32 (118.5)	30	37 (123.3)	30	37 (123.3)	58	70 (120.7)	167	202 (121.0)
울산	20	30 (150.0)	23	36 (156.5)	33	48 (145.5)	37	46 (145.5)	54	13 (24.1)	167	173 (103.6)
강원	24	29 (120.8)	26	32 (123.1)	32	39 (121.9)	34	41 (121.9)	50	34 (68.0)	166	175 (105.4)
충북	20	32 (160.0)	23	43 (187.0)	31	54 (174.2)	34	21 (61.7)	59	11 (18.6)	167	161 (96.4)
전북	27	33 (122.2)	26	31 (119.2)	33	41 (124.2)	33	42 (124.2)	48	55 (114.6)	167	202 (121.0)
경북	19	28 (147.4)	20	50 (250.0)	28	34 (121.4)	33	15 (121.4)	66	11 (16.7)	166	138 (83.1)
경남	25	35 (140.0)	23	37 (160.9)	31	47 (151.6)	33	46 (151.6)	54	17 (31.5)	166	182 (109.6)
합계	201	271 (134.8)	214	323 (150.9)	279	384 (137.6)	299	336 (137.6)	507	292 (57.6)	1,500	1,606 (107.1)

주: 1. ( ) 안은 비중

1) 지역은 각 혁신도시의 해당 시군구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2) 가중치 적용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지역별 연령 비율에 기초하여 응답 표본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즉, 지역별 전체 표본 수에서 해당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셀별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의 〈표 IV-2〉를 보면 부산 20대가 부산 전체 표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317이다(22/167).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부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0.1317에 맞추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sup>11)</sup> 지역별 응답 현황에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 현황은 〈표 V-16〉과 같다.

〈표 V-16〉가중치 적용한 표본 현황

(단위: 명, %)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부산	26 (13.3)	25 (12.8)	36 (18.4)	39 (19.9)	70 (35.7)	196 (100.0)
대구	23 (13.0)	27 (15.3)	32 (18.1)	34 (19.2)	61 (34.5)	177 (100.0)
광주·전남	27 (13.4)	33 (16.3)	36 (17.8)	36 (17.8)	70 (34.7)	202 (100.0)
울산	21 (12.1)	24 (13.9)	34 (19.7)	38 (22.0)	56 (32.4)	173 (100.0)
강원	25 (14.3)	27 (15.4)	34 (19.4)	36 (20.6)	53 (30.3)	175 (100.0)
충북	19 (11.8)	22 (13.7)	30 (18.6)	33 (20.5)	57 (35.4)	161 (100.0)
전북	33 (16.3)	31 (15.3)	40 (19.8)	40 (19.8)	58 (28.7)	202 (100.0)
경북	16 (11.6)	17 (12.3)	23 (16.7)	27 (19.6)	55 (39.9)	138 (100.0)
경남	28 (15.4)	25 (13.7)	34 (18.7)	36 (19.8)	59 (32.4)	182 (100.0)
합계	218 (13.6)	231 (14.4)	299 (18.6)	319 (19.9)	539 (33.6)	1,606 (10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저자 작성

### 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V-1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708명(44.1%), 여자가 898명(55.9%)이 수집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8.6세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397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명(18.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혼자가 1,041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사무·서비스직이 608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특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

11) (예시) 부산 20대:  $(22/167) \times 196 = 25.8$ 명(≈26명)

이 자가인 경우가 1,176명(73.2)으로 전세(185명, 11.5%)나 월세(226명, 14.0%)보다 많았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1,129명(70.3%)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0% 내외에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경북 김천시에서는 8.6%로 상대적으로 적게 수집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지가 혁신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49명(15.5%), 혁신지구 외 거주자는 1,357명(84.5%)으로 전체 응답자 중 혁신지구 내 거주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20년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부터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원주민은 1,168명(72.7%)으로 확인되었다.

〈표 V-17〉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1,606	100.0
성별	남자	707	44.0
	여자	899	56.0
연령	평균 48.6세	-	-
	20대	218	13.6
	30대	231	14.4
	40대	299	18.6
	50대	319	19.9
	60대 이상	539	33.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1	7.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	18.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4	17.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46	15.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58	16.1
	600만원 이상	397	24.7
결혼 여부	기혼	1,041	64.8
	미혼	456	28.4
	이혼·사별	110	6.8

〈표 V-17〉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직업	전문직 또는 관리직	242	15.1
	농림·수산·축산업 종사자	17	1.0
	자영업	124	7.7
	사무·서비스직	608	37.9
	학생	65	4.0
	주부	252	15.7
	무직	212	13.2
	단순노무	18	1.1
	생산·기능·기술직	33	2.0
	기타 <sup>1)</sup>	36	2.3
점유형태	자가	1,176	73.2
	전세	185	11.5
	월세	226	14.0
	기타 <sup>2)</sup>	20	1.2
주택유형	공공임대주택	62	3.9
	아파트	1,129	70.3
	단독주택	159	9.9
	원룸·오피스텔	81	5.0
	다세대·연립 주택	167	10.4
	기타 <sup>3)</sup>	8	0.4
지역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196	12.2
	대구(동구)	177	11.0
	광주·전남(나주시)	202	12.6
	울산(중구)	173	10.8
	강원(원주시)	175	10.9
	충북(진천군, 음성군)	161	10.0
	전북(전주시)	202	12.6
	경북(김천시)	138	8.6
	경남(진주시)	182	11.3

〈표 V-17〉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혁신지구 내 거주 여부	혁신지구 내 거주	249	15.5
	혁신지구 외 거주	1,357	84.5
거주기간	평균 236개월(약 20년)	-	-
	5년 미만	331	20.6
	5년 이상 15년 미만	413	25.7
	15년 이상 30년 미만	442	27.5
	30년 이상	420	26.2
원주민-이주민 여부	원주민	1,168	72.7
	이주민	438	27.3

주: 1) 군인,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포함  
 2) 기숙사, 상가주택, 주상복합 등 포함  
 3) 임대, 관사·사택, 기숙사 등 포함

자료: 저자 작성

## 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

### 1) 지역별 분석

#### 가) 혁신도시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크게 인구 및 일자리 효과와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의 거주인구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51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남 혁신도시에서 각각 2.77점, 2.75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대구(2.33점)와 울산(2.35점) 혁신도시에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45점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경남 혁신도시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충북 혁신도시가 2.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거주인구 증가 기여보다는 일자리 증가 기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남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구 및 일자리 효과를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울산 혁신도시에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V-18〉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혁신도시별 분석

지역	사례 수 (명)	거주인구 증가 (M/SD)	일자리 증가 (M/SD)
부산	1,606	2.51(0.748)	2.45(0.774)
대구	196	2.48(0.738)	2.42(0.757)
광주·전남	177	2.33(0.662)	2.36(0.705)
울산	202	2.50(0.756)	2.54(0.800)
강원	173	2.35(0.700)	2.29(0.746)
충북	175	2.52(0.786)	2.46(0.757)
전북	161	2.48(0.806)	2.29(0.860)
경북	202	2.42(0.770)	2.41(0.763)
경남	138	2.77(0.670)	2.59(0.757)

자료: 저자 작성

#### 나)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응답자 특성별로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서는 비광역시 거주민이 광역시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광역시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산업 및 일자리 수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주민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았을 것으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V-19〉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혁신도시 규모별 분석

구분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가주인구 증가	2.39(0.704)	2.56(0.763)	-0.17	-4.487**
일자리 증가	2.36(0.738)	2.50(0.788)	-0.14	-3.656**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앞서 살펴보았던 혁신도시별 기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2021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이 광주·전남 혁신도시(32.24%)였으며, 반면에 해당 시기에 감소율이 가장 컸던 지역은 부산 혁신도시(-12.55%)로 나타났다. 또한 총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2~2021년 사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전남 혁신도시(119.54%)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27.05%)로 확인되었다.

전체 혁신도시의 실제 인구 및 일자리 증가율 순위와 주민의 인식 순위를 정리하면 〈표 V-20〉과 같다. 일부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기초통계 및 인식 자료 간의 지역별 순위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차이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인구 증가 효과와 관련해 충북 혁신도시는 기초통계 자료에서는 혁신도시 중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2순위)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6순위). 반면에 부산 혁신도시는 실제 인구 증가율(9순위)은 가장 낮았으나 주민의 인식 수준은 중간 정도(5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증가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충북 혁신도시의 실제 일자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2순위), 이를 체감하는 주민의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다(9순위). 반면에 경남 혁신도시의 일자리 증가율은 혁신도시 중 낮은 수준(8순위)에 속하나 주민의 인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순위).

다음으로 혁신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초통계 및 인식 자료 모두 상위에 위치한 지역들은 대부분 비광역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인구

증가 효과와 관련해 기초통계 기준, 상위 지역은 광주·전남, 충북, 강원, 경북 혁신도시 등이며 인식 자료 기준으로도 경북, 경남,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모두 비광역시 지역들이다. 일자리 증가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와 인식 자료 상위 지역들은 모두 비광역시 지역들이다.

〈표 V-20〉 인구 및 일자리 효과: 기초통계<sup>1)</sup> 및 인식 자료 순위 비교

(단위: %, 점)

구분		1	2	3	4	5	6	7	8	9
인구 증가	기초 통계 (%)	광주 전남 (32.2)	충북 (13.9)	강원 (11.4)	경북 (2.8)	경남 (1.9)	전북 (0.4)	대구 (-0.8)	울산 (-10.7)	부산 (-13.8)
	인식 (점)	경북 (2.77)	경남 (2.75)	강원 (2.52)	광주 전남 (2.50)	부산 (2.48)	충북 (2.48)	전북 (2.42)	울산 (2.35)	대구 (2.33)
일자리 증가	기초 통계 (%)	광주 전남 (119.5)	충북 (67.6)	경북 (56.4)	강원 (53.8)	대구 (39.3)	부산 (36.3)	울산 (35.1)	경남 (28.7)	전북 (27.1)
	인식 (점)	경남 (2.74)	경북 (2.59)	광주 전남 (2.54)	강원 (2.46)	부산 (2.42)	전북 (2.41)	대구 (2.36)	울산 (2.29)	충북 (2.29)

주: 1) 기초통계 자료의 기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2022년임

자료: 저자 작성

##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가)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다음으로 인구 및 일자리 증가 등 직접적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이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표 V-21〉). 그 결과,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이 높은 경우, 인접성이 중간이나 낮은 수준에 비해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이 높은 지역, 즉 혁신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증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거주인구 증가 효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V-21〉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구분	인접성 높음 (M/SD, n=249)	인접성 중간 (M/SD, n=687)	인접성 낮음 (M/SD, n=669)	F-value
거주인구 증가	2.65(0.797)	2.49(0.726)	2.47(0.746)	5.761**
일자리 증가	2.56(0.817)	2.42(0.793)	2.45(0.734)	3.198*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나)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과 기관 이전 후부터 거주한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면, 〈표 V-22〉와 같다. 구체적으로 원주민에 비해 이주민의 경우 약간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2〉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구분	원주민 (M/SD, n=1,168)	이주민 (M/SD, n=438)	평균 차이	t-value
거주인구 증가	2.50(0.752)	2.52(0.737)	-0.02	-0.540
일자리 증가	2.44(0.775)	2.48(0.770)	-0.04	-0.84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이전 거주지 특성에 따라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V-23〉). 물론 이전 거주지 간에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이전 거주지역이 수도권 외 광역시인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3〉 인구 및 일자리 효과 인식: 이주민의 이전 거주지별 비교

구분	수도권 (M/SD, n=102)	수도권 외 광역시 (M/SD, n=188)	기타 지역 (M/SD, n=148)	F-value
거주인구 증가	2.53(0.784)	2.48(0.670)	2.57(0.785)	0.701
일자리 증가	2.47(0.879)	2.44(0.726)	2.54(0.746)	0.715

주: \* $p < 0.05$ , \*\* $p < 0.01$ ,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은 일부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실제 지역별 기초통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지구와 인접성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주민-이주민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다. 정주여건 개선 효과

### 1) 지역별 분석

#### 가) 혁신도시별 분석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였다(〈표 V-24〉).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한 10가지 측면의 정주여건 중에서는 주택 및 주거환경(2.74점), 상업시설(2.77점), 의료시설(2.72점), 지역 안전(2.76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자리 여건(2.02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그 밖에 문화체육시설(2.49점)이나 복지시설(2.44점)에 대해서도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혁신도시

거주민에 대한 사전인터뷰에서도 복합커뮤니티의 부족을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한 바 있다(〈표 IV-4〉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북 혁신도시 는 주택 및 주거환경(2.94점), 문화체육시설(2.81점), 복지시설(2.68점)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경남 혁신도시 역시 의료시설(2.96점), 지역 환경(2.92점), 지역 안전(3.05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상업시설(2.88점) 및 교통시설(2.94점) 등에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충북 혁신도시는 주택 및 주거환경, 환경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만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24〉 정주여건 만족도: 지역별 분석

지역	사례 수 (명)	주택·주거 환경 (M/SD)	상업 시설 (M/SD)	문화·체육 시설 (M/SD)	문화·체육 시설 (M/SD)	보육·교육 시설 (M/SD)	복지 시설 (M/SD)	의료 시설 (M/SD)	교통 시설 (M/SD)	일자리 여건 (M/SD)	지역 환경 (M/SD)	지역 안전 (M/SD)
전체	1,606	2.74 (0.704)	2.77 (0.680)	2.49 (0.745)	2.69 (0.682)	2.44 (0.717)	2.72 (0.741)	2.64 (0.722)	2.02 (0.719)	2.64 (0.677)	2.76 (0.632)	
부산	196	2.79 (0.695)	2.86 (0.719)	2.57 (0.755)	2.81 (0.736)	2.43 (0.726)	2.93 (0.662)	2.69 (0.686)	2.00 (0.672)	2.60 (0.696)	2.77 (0.618)	
대구	177	2.76 (0.757)	2.88 (0.671)	2.45 (0.748)	2.52 (0.718)	2.34 (0.745)	2.77 (0.721)	2.94 (0.607)	1.99 (0.704)	2.48 (0.743)	2.79 (0.661)	
광주·전남	202	2.72 (0.703)	2.81 (0.646)	2.45 (0.728)	2.78 (0.695)	2.52 (0.709)	2.92 (0.686)	2.76 (0.643)	2.06 (0.763)	2.64 (0.679)	2.75 (0.639)	
울산	173	2.82 (0.607)	2.75 (0.674)	2.48 (0.661)	2.65 (0.606)	2.42 (0.624)	2.65 (0.662)	2.51 (0.726)	2.14 (0.698)	2.58 (0.636)	2.68 (0.660)	
강원	175	2.61 (0.725)	2.73 (0.640)	2.41 (0.805)	2.68 (0.645)	2.46 (0.645)	2.66 (0.694)	2.49 (0.749)	1.96 (0.706)	2.57 (0.748)	2.78 (0.622)	
충북	161	2.64 (0.706)	2.35 (0.715)	2.21 (0.753)	2.49 (0.731)	2.21 (0.765)	2.18 (0.774)	2.21 (0.843)	2.10 (0.761)	2.59 (0.648)	2.53 (0.665)	
전북	202	2.65 (0.699)	2.81 (0.618)	2.45 (0.683)	2.70 (0.632)	2.38 (0.689)	2.82 (0.630)	2.59 (0.665)	1.84 (0.688)	2.56 (0.590)	2.71 (0.588)	
경북	138	2.94 (0.644)	2.84 (0.577)	2.81 (0.687)	2.71 (0.627)	2.68 (0.713)	2.44 (0.829)	2.65 (0.695)	2.02 (0.707)	2.82 (0.639)	2.77 (0.649)	
경남	182	2.73 (0.734)	2.86 (0.704)	2.64 (0.760)	2.80 (0.660)	2.54 (0.755)	2.96 (0.707)	2.81 (0.658)	2.08 (0.735)	2.92 (0.596)	3.05 (0.480)	

자료: 저자 작성

나)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이어 혁신도시 규모별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V-25〉). 먼저, 주택 및 주거환경(2.79점), 상업시설(2.83점), 의료시설(2.79점), 교통시설(2.71점)에 대한 만족도는 비광역시 대비 광역시 거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지역 간 만족수준의 차이가 가장 컸던 항목은 교통시설(0.13점)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상업단지가 발달되어 있던 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경우, 즉 기존 도시를 활용한 유형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소음이나 토양, 녹지 환경 등 지역 환경(2.68점)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비광역시 지역의 주민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V-25〉 정주여건 만족도: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구분	광역시 (M/SD, n=546)	비광역시 (M/SD, n=1,060)	평균 차이	t-value
주택·주거환경	2.79(0.689)	2.71(0.710)	0.08	2.275*
상업시설	2.83(0.691)	2.74(0.673)	0.09	2.509*
문화체육시설	2.50(0.725)	2.49(0.756)	0.01	0.428
보육·교육시설	2.67(0.700)	2.70(0.672)	-0.03	-0.920
복지시설	2.40(0.701)	2.46(0.724)	-0.06	-1.542
의료시설	2.79(0.690)	2.69(0.763)	0.10	2.665**
교통시설	2.71(0.695)	2.59(0.732)	0.13	3.221**
일자리 여건	2.04(0.693)	2.01(0.731)	0.03	0.945
지역 환경	2.55(0.694)	2.68(0.664)	-0.13	-3.378**
지역 안전	2.75(0.646)	2.77(0.625)	-0.02	-0.60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가)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을 기준으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V-26>과 같다. 구체적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지역 환경 등에서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실제로 혁신지구 인근에는 대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및 주거환경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인접성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혁신지구 내보다는 그 주변 지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지역 환경은 인접성이 높은 지역 내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V-26> 정주여건 만족도: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구분	인접성 높음 (M/SD, n=249)	인접성 중간 (M/SD, n=687)	인접성 낮음 (M/SD, n=669)	F-value
주택·주거환경	2.86(0.665)	2.73(0.702)	2.70(0.715)	5.299**
상업시설	2.67(0.743)	2.80(0.695)	2.78(0.637)	3.695*
문화체육시설	2.50(0.766)	2.51(0.749)	2.47(0.734)	0.653
보육·교육시설	2.68(0.707)	2.71(0.693)	2.67(0.660)	0.498
복지시설	2.45(0.728)	2.41(0.744)	2.47(0.682)	0.939
의료시설	2.49(0.805)	2.72(0.741)	2.81(0.696)	17.916**
교통시설	2.51(0.743)	2.66(0.736)	2.65(0.696)	4.654*
일자리 여건	2.10(0.767)	1.99(0.732)	2.02(0.684)	1.862
지역 환경	2.74(0.691)	2.64(0.668)	2.59(0.677)	4.308*
지역 안전	2.80(0.663)	2.77(0.626)	2.74(0.627)	0.89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나)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끝으로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업시설(2.80점) 및 의료시설(2.77점) 등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부터 거주하였던 원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주민의 경우 지역의 발전이 미비했을 때부터 거주하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되었을 수 있다. 반면에, 일자리 여건은 원주민보다는 이주민의 만족도(2.08점)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V-27〉 정주여건 만족도: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구분	원주민 (M/SD, n=1,168)	이주민 (M/SD, n=438)	평균 차이	t-value
주택·주거환경	2.74(0.689)	2.74(0.741)	0.00	-0.040
상업시설	2.80(0.646)	2.70(0.760)	0.10	2.372*
문화체육시설	2.50(0.738)	2.47(0.765)	0.03	0.860
보육·교육시설	2.70(0.677)	2.65(0.693)	0.05	1.266
복지시설	2.45(0.716)	2.42(0.720)	0.03	0.601
의료시설	2.77(0.714)	2.61(0.796)	0.16	3.860**
교통시설	2.64(0.707)	2.63(0.763)	0.01	0.127
일자리 여건	2.00(0.709)	2.08(0.740)	-0.08	-2.115*
지역 환경	2.64(0.669)	2.63(0.697)	0.01	0.149
지역 안전	2.76(0.625)	2.75(0.652)	0.01	0.28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이주민들의 이전 거주지 특성별로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일자리 여건 등에서 이전 거주지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상업시설(2.85점) 및 의료시설(2.71점)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거주지가 수도권 외 광역시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통시설(2.38점)에 대

해서는 이전에 수도권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 일자리 여건은 이전 거주지가 수도권 외 광역시인 경우 2.1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수도권인 경우는 1.9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V-28〉 정주여건 만족도: 이주민의 이전 거주지별 비교

구분	수도권 (M/SD, n=102)	수도권 외 광역시 (M/SD, n=188)	기타 지역 (M/SD, n=148)	F-value
주택·주거환경	2.70(0.694)	2.77(0.728)	2.72(0.792)	0.359
상업시설	2.62(0.769)	2.85(0.684)	2.57(0.816)	6.525**
문화체육시설	2.35(0.738)	2.53(0.743)	2.47(0.806)	1.844
보육·교육시설	2.64(0.629)	2.68(0.698)	2.62(0.731)	0.323
복지시설	2.31(0.739)	2.52(0.680)	2.37(0.743)	3.361*
의료시설	2.50(0.798)	2.71(0.735)	2.55(0.857)	2.958
교통시설	2.38(0.859)	2.74(0.643)	2.67(0.799)	7.616**
일자리 여건	1.92(0.658)	2.19(0.744)	2.06(0.769)	4.477*
지역 환경	2.68(0.613)	2.63(0.677)	2.60(0.776)	0.409
지역 안전	2.69(0.621)	2.82(0.631)	2.72(0.695)	1.647

주: \* $p < 0.05$ , \*\* $p < 0.01$ ,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 3) 소결

먼저 정주여건별로는 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속한 지역들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 주택 및 주거환경, 지역환경에 대해서는 인접성이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았다. 한편 원주민-이주민 간에 만족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여건은 의료시설로 확인되었으며, 이주민의 이전 거주지별로도 살펴보면 이전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영역 도출

#### 가. 정주여건의 중요도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중요도 대비 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개선영역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별 정주여건에 대한 중요도는 <표 V-2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주택 및 주거환경, 일자리 여건, 의료시설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혁신도시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2, 3순위 역시 일자리 여건 또는 의료시설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택 및 주거환경 요인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요소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중요도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왔던 주택 및 주거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건 중에서 지역별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산·대구·강원·전북·경남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여건이, 울산·충북·경북 혁신도시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각각 높았다. 한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역안전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9> 정주여건에 대한 중요도

(단위: 명, %)

지역	사례 수 (명)	주택 주거 환경	상업 시설	문화 체육 시설	보육 교육 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	교통 시설	일자리 여건	지역 환경	지역 안전
전체	1,606	50.1	1.9	1.6	3.2	2.2	10.3	5.5	12.7	5.6	7.0
부산	196	57.5	2.8	1.5	1.4	0.5	7.8	6.1	10.1	7.0	5.3
대구	177	54.4	3.9	1.3	5.3	2.3	5.5	8.0	9.8	4.9	4.6
광주·전남	202	49.9	1.5	2.0	3.0	3.4	7.1	7.9	8.5	6.4	10.4
울산	173	51.3	0.8	2.6	1.6	1.8	17.3	4.4	9.8	4.2	6.3
강원	175	43.5	1.5	0.5	3.4	1.9	9.8	6.3	18.0	8.8	6.3
충북	161	46.9	1.0	1.1	2.0	1.3	17.3	7.9	12.5	2.7	7.3

〈표 V-29〉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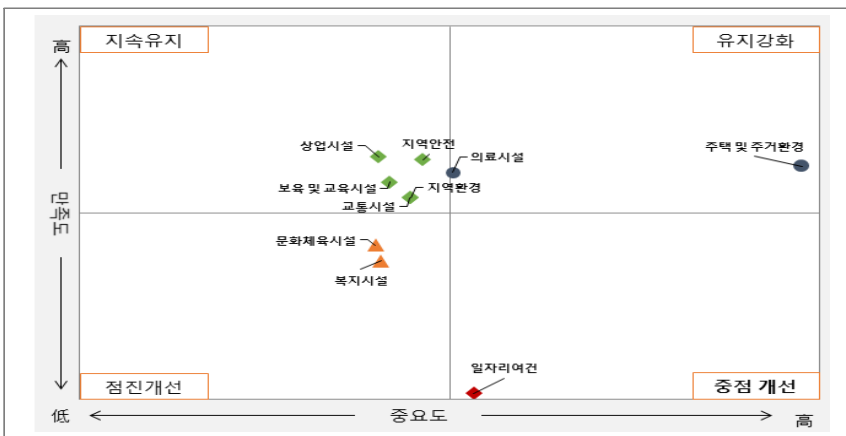
지역	사례 수 (명)	주택 주거 환경	상업 시설	문화 체육 시설	보육 교육 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	교통 시설	일자리 여건	지역 환경	지역 안전
전북	202	46.4	3.5	2.0	4.0	1.9	8.5	2.0	15.8	7.0	9.0
경북	138	41.7	0.7	2.6	4.6	6.4	14.8	4.7	13.3	4.4	6.8
경남	182	56.6	0.8	0.9	3.6	1.2	7.8	2.4	17.0	3.7	5.9

자료: 저자 작성

## 나. 중요도 대비 만족도 분석

이어 본 연구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기초하여 중요도 대비 만족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먼저, 혁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즉 개선이 시급한 중점 영역으로 일자리 여건이 도출되었다. 일자리 여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족도는 가장 낮으나(표 V-24), 중요도는 전체 정주여건 중 두 번째로 높았다(표 V-29). 그 밖에 시급하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도출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요인에 해당한다.

〔그림 V-7〕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반면에, 상업시설, 보육 및 교육시설, 교통시설, 지역 안전, 지역 환경 등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 유지 영역에 포함되었다. 끝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시설 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 강화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출된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점 개선영역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세부 항목에는 ① 일자리 제공의 충분성 ② 정규직 일자리 증가 ③ 전문직·관리직 일자리 증가 ④ R&D 및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증가 등을 포함하였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의 충분성이 2.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문직·관리직 일자리 증가(2.00점), R&D 및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증가(1.9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규직 일자리 증가는 1.96점으로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표 V-30〉 일자리 여건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세부 항목	사례 수	M/SD
일자리 제공의 충분성	1,606	2.07(0.738)
정규직 일자리 증가	1,606	1.96(0.719)
전문직·관리직 일자리 증가	1,606	2.00(0.724)
R&D 및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증가	1,606	1.99(0.741)

주: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점진 개선영역으로 도출된 문화체육시설은 ① 영화관 ② 공연·전시장 ③ 휴양지 및 관광지 ④ (공공) 도서관 ⑤ 실내 체육관 ⑥ 실외 운동장 ⑦ 녹지공간 및 공원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녹지공간 및 공원은 만족도가 2.81점으로 세부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공연·전시장(2.24점), 휴양지 및 관광지(2.23점) 등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1〉 문화체육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세부 평가항목	사례 수	M/SD
영화관	1,606	2.65(0.814)
공연·전시장(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1,606	2.24(0.857)
휴양지 및 관광지	1,606	2.23(0.847)
(공공) 도서관	1,606	2.65(0.820)
실내 체육관	1,606	2.33(0.801)
실외 운동장	1,606	2.40(0.818)
녹지공간 및 공원	1,606	2.81(0.825)

주: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끝으로 점진 개선영역 중 복지시설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복지시설은 ①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시설 ② 노인정,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③ 돌봄센터 등 요양시설 ④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노인정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53점)이었으며, 반면에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V-32〉 복지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세부 평가항목	사례 수	M/SD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시설	1,606	2.43(0.715)
노인정,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1,606	2.53(0.730)
돌봄센터 등 요양시설	1,606	2.47(0.735)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	1,606	2.34(0.734)

주: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세부 혁신도시별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2).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자리 여건은 중점 또는 점진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여건들이 중점 및 점진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산, 대구,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환경이 점진 개선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 강원, 충북, 경북 혁신도시는 교통시설이 점진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충북, 경북 혁신도시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중점 개선영역에 의료시설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혁신도시에서는 주택 및 주거 환경 여건이 중점 개선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혁신도시별 중점 및 점진 개선영역

지역	중점 개선영역	점진 개선영역
부산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 지역환경
대구	-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 지역환경
광주·전남	-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 지역환경
울산	-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 교통시설
강원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 교통시설
충북	• 일자리 여건 • 의료시설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 교통시설
전북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경북	• 일자리 여건 • 의료시설	• 복지시설 • 교통시설
경남	• 주택 및 주거환경 • 일자리 여건	• 문화체육시설 • 복지시설

자료: 저자 작성

#### 다.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혁신도시에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은 일자리 여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자리 여건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정규직 일자리 증가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았다.

한편, 세부 혁신도시별로는 일부 지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충북 및 경북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여건 외에도 의료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혁신도시에서는 주택 및 주거환경이 중점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점진 개선영역에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2)에 따르면 수도권은 1개 시도의 문화시설 수가 382.7개인 것에 비해 14개 시도는 124.4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4.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주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지역(시군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서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 지역에는 광역시와 비광역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인식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주민 간에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광역시는 주로 기존 도시를 활용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한 유형에 속하며, 비광역시는 대부분 신도시를 개발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곧 주민의 정주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주여건 역시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이 두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정주여건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는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이며 분석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역시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역사회의 정주여건은 주민의 정주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용진·김성희, 2016; 송홍수 외, 2015). 더불어, 성별, 연령, 원주민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 수, 자가소유 여부, 혁신도시 규모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sup>12)</sup> 분석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였고, 이어 응답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 결과이다(〈표 V-34〉). 정주여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상업시설(2.77점)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 안전(2.76점), 주택 및 주거환경(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일자리 여건(2.02점)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주의지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나 개별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V-34〉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세부 항목	사례 수	Min.	Max.	Mean	S.D
주택 및 주거환경	1,606	1	4	2.74	0.704
상업시설	1,606	1	4	2.77	0.680
문화체육시설	1,606	1	4	2.49	0.745
보육 및 교육시설	1,606	1	4	2.69	0.682
복지시설	1,606	1	4	2.44	0.717

12)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은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인접성에 따라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 제외하였다. 또한 이전 거주지는 일부 표본만 응답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V-34〉의 계속

세부 항목	사례 수	Min.	Max.	Mean	S.D
의료시설	1,606	1	4	2.72	0.741
교통시설	1,606	1	4	2.64	0.722
일자리 여건	1,606	1	4	2.02	0.719
지역 환경	1,606	1	4	2.64	0.677
지역 안전	1,606	1	4	2.76	0.632
정주의지	1,606	1	4	2.95	0.733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표 V-35〉).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이훈영,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계수가 최대 0.55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V-3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세부 항목	주택 주거 환경	상업 시설	문화 체육 시설	보육 교육 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	교통 시설	일자리 여건	지역 환경	지역 안전	정주 의지
주택·주거환경	1	-	-	-	-	-	-	-	-	-	-
상업시설	0.412**	1	-	-	-	-	-	-	-	-	-
문화체육시설	0.347**	0.474**	1	-	-	-	-	-	-	-	-
보육·교육시설	0.371**	0.482**	0.512**	1	-	-	-	-	-	-	-
복지시설	0.384**	0.436**	0.537**	0.533**	1	-	-	-	-	-	-
의료시설	0.318**	0.501**	0.433**	0.488**	0.444**	1	-	-	-	-	-
교통시설	0.326**	0.441**	0.421**	0.409**	0.393**	0.523**	1	-	-	-	-
일자리 여건	0.306**	0.323**	0.397**	0.359**	0.458**	0.308**	0.394**	1	-	-	-
지역 환경	0.415**	0.333**	0.381**	0.421**	0.429**	0.333**	0.373**	0.384**	1	-	-
지역 안전	0.407**	0.416**	0.371**	0.444**	0.416**	0.449**	0.481**	0.364**	0.550**	1	-
정주의지	0.264**	0.292**	0.229**	0.234**	0.191**	0.241**	0.251**	0.158**	0.248**	0.296**	1

주: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이어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광역시·비광역시로 구분한 모형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시에는 독립변수를 개별적으로 투입한 후 전체 독립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는 많은 독립변수들이 한 번에 모형에 투입될 경우 편차가 큰 독립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함이다.

먼저,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표 V-36〉).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9.086^{**}$ ), 모형의 설명력은 17.0%( $R^2=0.170$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Kutner et al., 2005).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 투입 모형 기준, 분산팽창지수(VIF)의 범위가 1.045~1.819로 검증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투입했을 때, 모든 정주여건이 주민의 정주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변수 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지역 안전( $B=0.341$ ,  $p<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업시설( $B=0.304$ ,  $p<0.01$ ), 지역환경( $B=0.269$ ,  $p<0.01$ ), 주택 및 주거환경( $B=0.265$ ,  $p<0.01$ ), 교통시설( $B=0.252$ ,  $p<0.01$ )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자리 여건( $B=0.162$ ,  $p<0.01$ )이 미치는 영향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주환경의 모든 변수를 한 번에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주여건 중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 $B=0.099$ ,  $p<0.01$ ), 상업시설( $B=0.131$ ,  $p<0.01$ ), 교통시설( $B=0.064$ ,  $p<0.05$ ), 지역환경( $B=0.070$ ,  $p<0.05$ ), 지역안전( $B=0.145$ ,  $p<0.01$ )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 안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변수를 개별적으로 투입한 경우와 한번에 투입한 경우 모두 지역 안전이 주민의 정주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제변수 중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연령, 원주민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이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모형에서는 자가 소유나 비광역시 거주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표 V-36〉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1)

세부 항목		B(S.E)	B(S.E)	B(S.E)	B(S.E)	B(S.E)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여성 (ref. 남성)	-0.039 (0.036)	-0.032 (0.036)	-0.008 (0.036)	-0.029 (0.036)	-0.009 (0.036)
	연령	0.004** (0.001)	0.005 (0.001)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원주민 (ref. 이주민)	0.134** (0.040)	0.100* (0.040)	0.117** (0.040)	0.113** (0.040)	0.120** (0.041)
	월평균 가구소득	0.043** (0.012)	0.041** (0.012)	0.046** (0.012)	0.048** (0.012)	0.047** (0.012)
	가구원 수	0.000 (0.018)	-0.003 (0.018)	-0.001 (0.018)	-0.005 (0.018)	-0.003 (0.018)
	자가 소유 (ref. 자가 외)	0.056 (0.043)	0.070 (0.043)	0.086* (0.044)	0.081 (0.043)	0.082 (0.044)
	비광역시 거주 (ref. 광역시)	-0.033 (0.037)	-0.029 (0.037)	-0.052 (0.037)	-0.064 (0.037)	-0.066 (0.037)
정주 여건	주택 및 주거환경	0.265** (0.025)	-	-	-	-
	상업시설	-	0.304** (0.026)	-	-	-
	문화체육시설	-	-	0.219** (0.024)	-	-
	보육 및 교육시설	-	-	-	0.252** (0.026)	-
	복지시설	-	-	-	-	0.193** (0.025)
	의료시설	-	-	-	-	-
	교통시설	-	-	-	-	-
	일자리 여건	-	-	-	-	-
	지역 환경	-	-	-	-	-
지역 안전	-	-	-	-	-	
상수항	1.867** (0.142)	1.711** (0.144)	1.988** (0.141)	1.898** (0.143)	2.078** (0.142)	
표본 수	1,606	1,606	1,606	1,606	1,606	
모형 적합도 및 설명력	F	21.549**	25.367**	18.285**	19.452**	14.943**
	R <sup>2</sup>	0.097	0.113	0.084	0.089	0.070

주: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V-37〉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2)

세부 항목		B(S.E)	B(S.E)	B(S.E)	B(S.E)	B(S.E)	B(S.E)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여성 (ref. 남성)	-0.008 (0.036)	-0.004 (0.036)	-0.009 (0.037)	-0.012 (0.036)	0.004 (0.035)	-0.030 (0.035)
	연령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04** (0.001)	0.005** (0.001)	0.004** (0.001)
	원주민 (ref. 이주민)	0.090* (0.040)	0.124** (0.040)	0.137** (0.041)	0.121** (0.04)	0.121** (0.04)	0.110** (0.039)
	월평균 가구소득	0.047** (0.012)	0.046** (0.012)	0.043** (0.012)	0.045** (0.012)	0.042** (0.012)	0.043** (0.011)
	가구원 수	-0.004 (0.018)	0.000 (0.018)	0.002 (0.018)	-0.003 (0.018)	0.006 (0.018)	0.001 (0.017)
	자가 소유 (ref. 자가 외)	0.084 (0.043)	0.087* (0.043)	0.094* (0.044)	0.095* (0.043)	0.072 (0.043)	0.058 (0.042)
	비광역시 거주 (ref. 광역시)	-0.034 (0.037)	-0.024 (0.037)	-0.048 (0.038)	-0.088* (0.037)	-0.061 (0.036)	-0.036 (0.036)
정주 여건	주택 및 주거환경	-	-	-	-	-	0.099** (0.029)
	상업시설	-	-	-	-	-	0.131** (0.032)
	문화체육시설	-	-	-	-	-	0.042 (0.030)
	보육 및 교육시설	-	-	-	-	-	0.033 (0.033)
	복지시설	-	-	-	-	-	-0.047 (0.032)
	의료시설	0.228** (0.024)	-	-	-	-	0.021 (0.030)
	교통시설	-	0.252** (0.024)	-	-	-	0.064* (0.030)
	일자리 여건	-	-	0.162** (0.025)	-	-	-0.019 (0.028)
	지역 환경	-	-	-	0.269** (0.026)	-	0.070* (0.032)
	지역 안전	-	-	-	-	0.341** (0.027)	0.145** (0.036)
상수항		1.900** (0.144)	1.789** (0.146)	2.176** (0.141)	1.896** (0.141)	1.555** (0.148)	1.090** (0.153)
표본 수		1,606	1,606	1,606	1,606	1,606	1,606
모형 적합도 및 설명력	F	18.950**	21.121**	12.611**	21.091**	27.317**	19.086**
	R <sup>2</sup>	0.087	0.096	0.059	0.096	0.120	0.170

주: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비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광역시에서는 전체 정주여건 중 주택 및 주거환경(B=0.184,  $p<0.01$ )과 지역 안전(B=0.098,  $p<0.05$ ) 요인이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광역시에서는 상업시설(B=0.165,  $p<0.01$ ), 지역 안전(B=0.175,  $p<0.01$ ) 요인이 정주의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역 안전이 전체 혁신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음을 고려하면, 그 외에 두 지역에서 유의한 변수가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주민의 정주의지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통제변수 역시 두 지역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광역시에서는 원주민 여부(B=0.152,  $p<0.01$ ), 자가 소유 여부(B=0.151,  $p<0.05$ )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광역시 지역에서는 연령(B=0.004,  $p<0.05$ ), 월평균 가구소득(B=0.065,  $p<0.01$ ) 이 주민의 정주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8〉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세부 항목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비광역시
		B(S.E)	B(S.E)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여성(ref. 남성)	0.031(0.049)	-0.064(0.047)
	연령	0.002(0.002)	0.004(0.002)*
	원주민(ref. 이주민)	0.152(0.057)**	0.086(0.051)
	월평균가구소득	-0.004(0.016)	0.065(0.015)**
	가구원 수	-0.008(0.026)	0.005(0.022)
	자가 소유(ref. 자가 외)	0.151(0.059)*	0.019(0.055)
정주 여건	주택 및 주거환경	0.184(0.043)**	0.064(0.038)
	상업시설	0.071(0.045)	0.165(0.044)**
	문화체육시설	-0.001(0.043)	0.060(0.039)
	보육 및 교육시설	0.047(0.046)	0.025(0.045)

〈표 V-38〉의 계속

세부 항목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비광역시
		B(S.E)	B(S.E)
정주 여건	복지시설	-0.011(0.045)	-0.055(0.043)
	의료시설	0.075(0.046)	0.004(0.039)
	교통시설	0.060(0.046)	0.069(0.039)
	일자리 여건	0.006(0.041)	-0.027(0.037)
	지역 환경	0.034(0.045)	0.072(0.043)
	지역 안전	0.098(0.048)*	0.175(0.049)**
	상수항	1.086(0.198)**	0.971(0.183)**
표본 수		546	1,060
모형 적합도 및 설명력	F	10.417**	12.481**
	R <sup>2</sup>	0.240	0.161

주: \*p<0.05, \*\*p<0.01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지역 안전, 주택 및 주거환경, 상업시설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 안전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이다. 지역 안전은 광역시 및 비광역시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응급의료시스템(2.5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시의 경우 비광역시 대비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던 항목은 자연재해 관리(2.74점), 화재(산불 등) 대응(2.73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에 비광역시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2.55점)가 광역시 대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각 지역 내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은 광역시는 건축물 유지보수, 비광역시는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확인되었다.

〈표 V-39〉 지역 안전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세부 항목	전체 (n=1,606)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자연재해 관리	2.83 (0.682)	2.74 (0.694)	2.88 (0.671)	-0.14	-3.783**
건축물 유지보수	2.63 (0.700)	2.59 (0.725)	2.64 (0.687)	-0.05	-1.315
교통사고 처리·대응	2.70 (0.654)	2.73 (0.650)	2.69 (0.656)	0.04	1.258
범죄 예방·치안	2.73 (0.696)	2.72 (0.709)	2.74 (0.689)	-0.02	-0.525
화재(산불 등) 대응	2.78 (0.637)	2.73 (0.645)	2.80 (0.631)	-0.07	-2.004*
응급의료 시스템	2.58 (0.770)	2.65 (0.712)	2.55 (0.796)	0.10	2.464*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다음은 주택 및 주거환경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이다. 전반적인 측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원룸·오피스텔의 기반시설(2.47점)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및 주거환경은 광역시에서만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광역시 대비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은 원룸·오피스텔의 주택공급량(2.60점)으로 나타났고, 광역시 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전반적인 측면과 동일하게 원룸·오피스텔의 기반시설(2.50점)이었다.

〈표 V-40〉 주택 및 주거환경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세부 항목	전체 (n=1,606)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공공임대주택: 주택 공급량	2.57 (0.786)	2.53 (0.759)	2.59 (0.800)	-0.06	-1.523
공공임대주택: 주택의 질 <sup>1)</sup>	2.57 (0.736)	2.55 (0.720)	2.58 (0.744)	-0.03	-0.809

〈표 V-40〉의 계속

세부 항목	전체 (n=1,606)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sup>2)</sup>	2.65 (0.742)	2.62 (0.766)	2.66 (0.733)	-0.04	-1.174
아파트: 주택 공급량	2.70 (0.776)	2.73 (0.758)	2.68 (0.785)	0.05	1.019
아파트: 주택의 질	2.81 (0.714)	2.85 (0.701)	2.78 (0.720)	0.07	1.613
아파트: 기반시설	2.81 (0.733)	2.82 (0.738)	2.81 (0.731)	0.01	0.427
원룸·오피스텔: 주택 공급량	2.66 (0.722)	2.60 (0.698)	2.70 (0.732)	-0.10	-2.740**
원룸·오피스텔: 주택의 질	2.60 (0.715)	2.56 (0.735)	2.61 (0.704)	-0.05	-1.310
원룸·오피스텔: 기반시설	2.47 (0.742)	2.50 (0.751)	2.46 (0.738)	0.04	1.182

주: 1.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1) 주택의 질: 면적, 냉난방 시설 등

2) 기반시설: 쓰레기처리, 주변도로 등

자료: 저자 작성

끝으로 상업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이다. 전반적인 측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백화점(2.21점)으로 나타났으며, 비광역시 내에서도 백화점(2.01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41〉 상업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광역시-비광역시 비교

세부 항목	전체 (n=1,606)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슈퍼마켓·식품점	2.86 (0.715)	2.91 (0.708)	2.84 (0.718)	0.07	1.868
편의점	3.16 (0.652)	3.18 (0.680)	3.16 (0.637)	0.02	0.580
대형마트	2.75 (0.877)	2.85 (0.817)	2.70 (0.903)	0.15	3.379**

〈표 V-41〉의 계속

세부 항목	전체 (n=1,606)	혁신도시 규모별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백화점	2.21 (0.940)	2.59 (0.880)	2.01 (0.910)	0.58	12.098**
전통시장	2.67 (0.791)	2.79 (0.757)	2.60 (0.800)	0.19	4.650**
식당, 음식점	2.76 (0.723)	2.72 (0.752)	2.78 (0.707)	-0.06	-1.415
찻집, 카페	2.91 (0.714)	2.85 (0.760)	2.95 (0.687)	-0.10	-2.44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안전으로 밝혀졌으며,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 기초하면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광역시에서는 주택 및 주거환경 요인이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 따르면, 원룸·오피스텔 주변의 기반시설(쓰레기 처리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비광역시에서는 지역 안전 외에,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주민의 정주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상업시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 기초하면,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센터의 건설 또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추가 의견

### 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 1) 지역별 분석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거주지 내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2.47점으로 나타났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2.13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경험 및 참여도는 1.94점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남 혁신도시에서 2.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혁신도시에서 2.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마찬가지로 경남 혁신도시에서 2.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혁신도시에서 1.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경험 및 참여도는 경북 및 경남 혁신도시에서 2.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혁신도시에서 1.7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의 인지도 및 참여도를 보인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경남 및 경북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충북 혁신도시에서는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42〉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지역별 분석

지역	사례 수 (명)	이전 공공기관 인지도 (M/SD)	지역사회 공헌활동 인지도 (M/SD)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참여도 (M/SD)
전체	1,606	2.47(0.734)	2.13(0.698)	1.94(0.735)
부산	196	2.32(0.732)	2.07(0.705)	1.90(0.679)
대구	177	2.37(0.712)	2.07(0.658)	1.85(0.711)
광주·전남	202	2.37(0.770)	2.10(0.700)	1.94(0.686)
울산	173	2.57(0.700)	2.12(0.666)	1.89(0.728)
강원	175	2.54(0.734)	2.15(0.695)	1.94(0.727)
충북	161	2.33(0.785)	1.97(0.742)	1.75(0.758)
전북	202	2.39(0.682)	2.06(0.621)	1.89(0.694)
경북	138	2.65(0.705)	2.27(0.695)	2.16(0.759)
경남	182	2.81(0.634)	2.40(0.729)	2.16(0.813)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자(n=338)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92점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3.05점) 및 전북(3.00점), 경남(2.99점) 혁신도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강원(2.74) 혁신도시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43〉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만족도

지역	사례 수 <sup>1)</sup> (명)	지역사회 공헌활동 만족도 (M/SD)
전체	338	2.92(0.541)
부산	36	2.83(0.446)
대구	29	2.81(0.518)
광주·전남	40	3.05(0.598)
울산	31	2.93(0.452)
강원	34	2.74(0.677)
충북	30	2.96(0.388)
전북	34	3.00(0.604)
경북	46	2.89(0.524)
경남	58	2.99(0.546)

주: 1)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자

자료: 저자 작성

**(참고)** 광주·전남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2015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매년 가을 ‘빛가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본 페스티벌은 2023년 행사 기준 혁신지구의 중앙에 있는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데, 공연행사, 체험존, 플리마켓, KDN상생마켓,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 축제를 재개하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전라남도도는 ‘빛가람 페스티벌’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이 행사를 지역의 랜드마크격 축제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전라남도청, 2022. 10. 23.).

## 2)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이러 혁신도시 규모별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광역시(2.41점)보다 비광역시(2.51점)에서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비광역시  
가 광역시보다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전 공공기관  
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 및 참여도는 광역시(1.88점)보다는 비광역시  
(1.97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44〉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혁신도시 규모별 비교

세부 항목	광역시 (n=546)	비광역시 (n=1,060)	평균 차이	t-value
이전 공공기관 인지도	2.41(0.722)	2.51(0.739)	-0.10	-2.438*
지역사회 공헌활동 인지도	2.09(0.677)	2.16(0.708)	-0.07	-1.920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 및 참여도	1.88(0.704)	1.97(0.750)	-0.09	-2.264*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 3)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비교

다음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을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V-45〉와 같다. 구체적으로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이 높은 주민  
들의 기관 인지도, 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 및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인접성에 따른 비교

세부 항목	인접성 높음 (n=249)	인접성 중간 (n=688)	인접성 낮음 (n=670)	F-value
이전 공공기관 인지도	2.62(0.722)	2.45(0.736)	2.44(0.731)	6.174*
지역사회 공헌활동 인지도	2.25(0.706)	2.09(0.715)	2.13(0.675)	4.423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 및 참여도	2.04(0.752)	1.88(0.743)	1.96(0.717)	4.78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 4)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끝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을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비교한 결과,

이전 공공기관 인지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원주민의 인지도가 2.50점으로 이주민 2.4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6〉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원주민-이주민 간 비교

세부 항목	원주민 (n=1,168)	이주민 (n=438)	평균 차이	t-value
이전 공공기관 인지도	2.50 (0.718)	2.41 (0.772)	0.09	2.285*
지역사회 공헌활동 인지도	2.14 (0.688)	2.11 (0.725)	0.03	0.616
지역사회 공헌활동 경험 및 참여도	1.94 (0.725)	1.94 (0.764)	0.00	-0.127

주: \*p<0.05, \*\*p<0.01,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저자 작성

##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타 의견

### 1)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지원사항)

본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주민 채용 및 일자리 창출이 전체 응답의 3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역 내 시설, 복지 등에 투자가 20.2%로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앞서 설문조사와도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및 봉사(10.2%), 지역 경제 및 상권 등에 기여(6.5%)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V-47〉 이전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지원사항)

(단위: 건, %)

항목	응답 수	비율
전체 응답 수 <sup>1)</sup>	1,295	100.0
주민 채용·일자리 창출	417	32.2
지역 대상 시설·복지 등에 투자	262	20.2
지역사회에 대한 직원들의 기부 및 봉사	132	10.2
지역 경제 및 상권 등에 기여	84	6.5

〈표 V-47〉의 계속

(단위: 건, %)

항목	응답 수	비율
지역민 대상 행사·프로그램 진행	79	6.1
직원들의 지역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유도	67	5.2
주민들에게 기관 시설 개방	37	2.9
전체 발전에 대한 기여	33	2.5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지원	24	1.9
공공기관 관련 정보의 공유, 홍보	21	1.6
지역사회와의 융화 강화	21	1.6
기관 자체적인 업무강화	19	1.5
지역 내 기관, 기업, 학교 등과 협업	15	1.2
이미 기여가 충분, 존재 자체가 중요	11	0.8
조세 납부 확대	9	0.7
기타 <sup>2)</sup>	64	4.9

주: 1) 없음, 잘 모름 등 제외

2)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지역사회 홍보 활동 활성화 등

자료: 저자 작성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환경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혁신도시에서는 주민 채용·일자리 창출, 지역 대상 시설·복지 등에 대한 투자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대구, 광주·전남, 경북, 경남 혁신도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울산이나 전북 혁신도시에서는 주민채용·일자리 창출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대상 시설·복지 등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표 V-48〉 이전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지원사항, 지역별 분류)

(단위: 건, %)

항목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전체 응답 수 <sup>1)</sup>	149 (100.0)	134 (100.0)	144 (100.0)	138 (100.0)	146 (100.0)	129 (100.0)	182 (100.0)	115 (100.0)	158 (100.0)
주민 채용· 일자리 창출	47 (31.5)	44 (32.8)	48 (33.3)	52 (37.7)	48 (32.9)	31 (24.0)	68 (37.4)	32 (27.8)	47 (29.7)
지역 대상 시설·복지 등에 투자	34 (22.8)	27 (20.1)	31 (21.5)	25 (18.1)	19 (13.0)	40 (31.0)	22 (12.1)	22 (19.1)	42 (26.6)
지역사회에 대한 직원들의 기부 및 봉사	11 (7.4)	18 (13.4)	15 (10.4)	15 (10.9)	20 (13.7)	10 (7.8)	11 (6)	13 (11.3)	19 (12)
지역 경제 및 상권 등에 기여	10 (6.7)	6 (4.5)	9 (6.3)	7 (5.1)	12 (8.2)	12 (9.3)	17 (9.3)	2 (1.7)	9 (5.7)
지역민 대상 행사·프로그램 진행	5 (3.4)	8 (6.0)	4 (2.8)	9 (6.5)	11 (7.5)	8 (6.2)	16 (8.8)	8 (7.0)	10 (6.3)
직원들의 지역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유도	10 (6.7)	4 (3.0)	4 (2.8)	7 (5.1)	12 (8.2)	10 (7.8)	8 (4.4)	9 (7.8)	3 (1.9)
주민들에게 기관 시설 개방	2 (1.3)	3 (2.2)	6 (4.2)	3 (2.2)	4 (2.7)	2 (1.6)	3 (1.6)	7 (6.1)	7 (4.4)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8 (5.4)	3 (2.2)	6 (4.2)	3 (2.2)	1 (0.7)	3 (2.3)	3 (1.6)	4 (3.5)	2 (1.3)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지원	1 (0.7)	4 (3.0)	4 (2.8)	2 (1.4)	2 (1.4)	3 (2.3)	3 (1.6)	3 (2.6)	2 (1.3)
공공기관 관련 정보의 공유, 홍보	3 (2.0)	1 (0.7)	5 (3.5)	4 (2.9)	1 (0.7)	-	5 (2.7)	1 (0.9)	1 (0.6)
지역사회와의 융화 강화	3 (2.0)	1 (0.7)	-	2 (1.4)	4 (2.7)	1 (0.8)	7 (3.8)	-	3 (1.9)
기관 자체적인 업무강화	3 (2.0)	4 (3.0)	1 (0.7)	1 (0.7)	1 (0.7)	1 (0.8)	3 (1.6)	1 (0.9)	4 (2.5)
지역 내 기관, 기업, 학교 등과 협업	1 (0.7)	1 (0.7)	2 (1.4)	3 (2.2)	2 (1.4)	2 (1.6)	1 (0.5)	2 (1.7)	1 (0.6)
이미 기여가 충분, 존재 자체가 중요	1 (0.7)	2 (1.5)	1 (0.7)	1 (0.7)	-	1 (0.8)	2 (1.1)	1 (0.9)	2 (1.3)
조세 납부 확대	-	-	2 (1.4)	-	1 (0.7)	-	3 (1.6)	1 (0.9)	2 (1.3)
기타 <sup>2)</sup>	10 (6.7)	8 (6.0)	6 (4.2)	4 (2.9)	8 (5.5)	5 (3.9)	10 (5.5)	9 (7.8)	4 (2.5)

주: 1. ( ) 안은 비중

1) 없음, 잘 모름 등 제외

2)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지역사회 홍보 활동 활성화 등

자료: 저자 작성

## 2)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다음으로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인구유입 및 직원정착 유도(18.6%),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18.5%) 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자리 확대 및 지역민 채용(13.5%), 교통 및 접근성(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9〉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단위: 건, %)

항목	응답 수	비율
전체 응답 수 <sup>1)</sup>	1,239	100.0
지방 인구유입 및 직원 정착	230	18.6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	229	18.5
일자리, 지역인재 채용	167	13.5
교통 및 접근성	104	8.4
이전 지역 및 입지 선정	97	7.8
지방의 특성 및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90	7.3
지역사회와의 융화	52	4.2
지역경제 활성화	36	2.9
보다 적극적인 이전 정책 추진 필요	35	2.8
주민 대상 복지, 치안 등 행정에 대한 고려	28	2.3
기관 업무의 효율성, 기관 구성원에 대한 고려	25	2.0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	20	1.6
이전 선정 대상 기관	14	1.1
혁신지구 외 지역에 대한 포용	13	1.0
투기 방지 등 부동산 문제 대응	13	1.0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대, 회의론	11	0.9
공공기관·혁신도시 홍보 및 정보공유	11	0.9
환경문제에 관한 고려	7	0.6
민간부문의 이전까지 독려	4	0.3
기타 <sup>2)</sup>	53	4.3

주: 1) 없음, 잘 모름 등 제외

2) 기타: 지역 전반에 고른 배치 필요, 해당 지자체와 적극 소통 필요 등

자료: 저자 작성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 교통 미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혁신도시에서는 일자리,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강원, 전북, 경남 혁신도시에서는 지방 인구유입 및 직원 정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충북, 경북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끝으로 전북 혁신도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의 특성 및 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50〉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지역별 분류)

(단위: 건, %)

항목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전체 응답 수 <sup>1)</sup>	153 (100)	137 (100)	150 (100)	127 (100)	142 (100)	117 (100)	168 (100)	111 (100)	134 (100)
지방 인구유입 및 직원 정착	17 (11.1)	17 (12.4)	32 (21.3)	27 (21.3)	36 (25.4)	25 (21.4)	31 (18.5)	19 (17.1)	26 (19.4)
지역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	21 (13.7)	19 (13.9)	30 (20.0)	27 (21.3)	34 (23.9)	35 (29.9)	15 (8.9)	25 (22.5)	23 (17.2)
일자리, 지역인재 채용	18 (11.8)	28 (20.4)	14 (9.3)	19 (15.0)	21 (14.8)	12 (10.3)	19 (11.3)	11 (9.9)	25 (18.7)
교통 및 접근성	21 (13.7)	15 (10.9)	9 (6.0)	11 (8.7)	19 (13.4)	9 (7.7)	6 (3.6)	10 (9.0)	4 (3.0)
이전 지역 및 입지 선정	14 (9.2)	9 (6.6)	17 (11.3)	5 (3.9)	5 (3.5)	7 (6.0)	19 (11.3)	7 (6.3)	14 (10.4)
지방의 특성 및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11 (7.2)	12 (8.8)	10 (6.7)	9 (7.1)	3 (2.1)	4 (3.4)	26 (15.5)	7 (6.3)	8 (6.0)
지역사회와의 융화	7 (4.6)	6 (4.4)	8 (5.3)	5 (3.9)	3 (2.1)	2 (1.7)	7 (4.2)	8 (7.2)	6 (4.5)
지역경제 활성화	1 (0.7)	4 (2.9)	6 (4.0)	3 (2.4)	5 (3.5)	5 (4.3)	6 (3.6)	3 (2.7)	3 (2.2)
보다 적극적인 이전 정책 추진 필요	8 (5.2)	5 (3.6)	5 (3.3)	2 (1.6)	-	-	5 (3.0)	6 (5.4)	4 (3.0)
주민 대상 복지, 치안 등 행정에 대한 고려	6 (3.9)	4 (2.9)	2 (1.3)	4 (3.1)	2 (1.4)	5 (4.3)	2 (1.2)	3 (2.7)	-



〈표 V-50〉의 계속

(단위: 건, %)

항목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기관 업무의 효율성, 기관 구성원에 대한 고려	5 (3.3)	2 (1.5)	4 (2.7)	3 (2.4)	2 (1.4)	1 (0.9)	5 (3.0)	1 (0.9)	2 (1.5)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	3 (2.0)	1 (0.7)	3 (2.0)	2 (1.6)	3 (2.1)	2 (1.7)	4 (2.4)	-	2 (1.5)
이전 선정 대상 기관	5 (3.3)	1 (0.7)	1 (0.7)	-	1 (0.7)	1 (0.9)	3 (1.8)	2 (1.8)	-
혁신지구 외 지역에 대한 포용	1 (0.7)	1 (0.7)	1 (0.7)	-	1 (0.7)	2 (1.7)	1 (0.6)	4 (3.6)	2 (1.5)
투기 방지 등 부동산 문제 대응	1 (0.7)	1 (0.7)	-	1 (0.8)	-	2 (1.7)	2 (1.2)	1 (0.9)	5 (3.7)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대, 회의를론	2 (1.3)	-	1 (0.7)	1 (0.8)	1 (0.7)	3 (2.6)	1 (0.6)	2 (1.8)	-
공공기관·혁신도시 홍보 및 정보공유	2 (1.3)	2 (1.5)	1 (0.7)	2 (1.6)	-	-	3 (1.8)	-	1 (0.7)
환경문제에 관한 고려	2 (1.3)	-	3 (2.0)	-	1 (0.7)	1 (0.9)	-	-	-
민간부문의 이전까지 독려	1 (0.7)	-	-	-	-	-	-	-	3 (2.2)
기타 <sup>2)</sup>	7 (4.6)	10 (7.3)	3 (2.0)	6 (4.7)	5 (3.5)	1 (0.9)	13 (7.7)	2 (1.8)	6 (4.5)

주: 1. ( ) 안은 표준편차

1) 없음, 잘 모름 등 제외

2) 기타: 지역 전반에 고른 배치 필요, 해당 지자체와 적극 소통 필요 등

자료: 저자 작성

## 6.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실제 기초통계 자료의 경향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광역시(2.39점)보다는 비광역시(2.56점)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통계청 자료에서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2012년 기준으로 2012~2021년 사이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구 증가율이나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증가율이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에서 높았다. 특히, 앞서 〈표 V-2〉, 〈표 V-10〉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 증가율이나 근로자 수 증가율이 높았던 상위 4개 지역은 모두 비광역시이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 효과는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 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주민의 체감 정도 역시 높을 수 있다. 즉,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구 및 일자리 효과는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일자리 효과는 혁신지구와 인접성이 높을수록 주민의 체감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창수·이환웅, 2020; Faggio, 2019). 반면에,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중 일자리 여건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구 효과와 일자리 효과를 비교했을 때, 인구 효과 대비 일자리 효과에 대한 체감 정도가 낮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여건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일자리 증가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통계청 자료에서는 비수도권(0.48%p) 대비 혁신도시(4.85%p) 상용근로자의 2012년 대비 2021년의 비중 변화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의 일자리 여건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일자리 여건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중점 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는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정주여건 중 주택 및 주거환경,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한 만족수준이 광역시 대비 비광역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의지 증대에는 지역 안전 요소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역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의 정주의지 역시 증대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택 및 주거환경 요인은 광역시에서만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상업시설은 비광역시에서만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섯째,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광역시 대비 비광역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경험 및 참여도 등이 비광역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섯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으로는 일자리 확대 및 지역 내 시설 및 인프라 등 정주환경 개선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원사항이나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민 채용 및 일자리 확대, 지역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 VI. 결론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혁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의 인식이 지역별, 혁신도시 규모별, 혁신지구와의 인접성, 원주민-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은 중점 개선영역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지속거주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별 인구 현황이나 일자리 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적 목표인 수도권 인구의 분산 및 지역 내 일자리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의 거주 인구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내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에 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편,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의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하다면, 입지 선정 시 지역의 발전 정도와 기관 간 균형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 정도는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광역시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의 배치가 한 지역에 지나치게 몰리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주민의 체감 정도가 지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혁신도시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주민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다는 것은 주민의 체감 정도와 관련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별 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던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내용에 기초하면, 지역주민 채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체감 정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인재의 기준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졸업 예정)한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민경률·손호성, 2020).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지역인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지역인재 채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자리 여건이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고, 따라서 주민들은 일자리 여건이 정주의지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인재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채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 출생이나 초중고 교육을 받은 경우 등으로 지역인재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권영섭 외(2015)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방안 중 하나

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역 내 시설물 점검이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 안전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정주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안전의 세부 항목 중에서는 건축물 유지 및 보수와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전반적인 지역 안전 만족수준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위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시설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응급의료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에는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우선순위를 달리 두고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는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지역 규모나 발전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비광역시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상업시설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이다. 첫째, 본 연구는 혁신도시 지역주민 중 일부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즉,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표본조사가 갖는 한계를 감안하고, 분석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에도 일차적으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으로 하고, 본 연구 결과는 이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현재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응답 내용에 다소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 지역을 떠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하거나,

혁신도시와 유사한 조건의 대조군 지역을 설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항목 도출 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 수가 적어 응답 내용에 대해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추후에는 인터뷰 대상자 수를 늘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

-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보도자료, 2005a. 6. 24.  
\_\_\_\_\_,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2005b. 7. 27.
- 고창수·이환웅,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확대가 지역 민간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총괄편(2003~2015)』,  
국토교통부, 2016.
- \_\_\_\_\_,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 보도자료, 2022.  
9. 26.
- 권영섭·김진범·하수정·현태환·김가연,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2015.
- 김광익·이동우·권영섭·김형진·박경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백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2006.
- 김민곤·박지형·송용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2017, pp. 335~366.
- 김용진·김성희,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분당신도  
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5호,  
2016, pp. 405~411.
- 김윤서·김종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4권 제4호, 2016, pp. 73~90.
- 김준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2호, 2022, pp. 119~145.



- 김태환·민성희·김은란·서연미,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국토정책 Brief, 2020.
- 김현정·박찬익·박관아, 「혁신도시 이주형태와 도시 정주환경과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4권 제1호, 2022, pp. 27~48.
- 남창우·송인호·한재필·문운상·이종연·마강래,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 문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KDI 정책포럼』, 제283호, 한국개발연구원, 2021.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 민경률·손호성,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배성민, 「설문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비교」,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배준구,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지방정부연구』, 제9권, 2006, pp. 171~189.
- 백민·안형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 평가 분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2호, 2018, pp. 444~455.
- 변재연,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6.
- 송홍수·임준홍·김한수, 「대구 도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거주의향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6권 제5호, 2015, pp. 133~141.
- 이경영·정문기,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5호, 2021, pp. 203~227.
- 이동우·박경현·장호연·심소희,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연구』, 과천: 건설교통부, 2006.
- 이원희·하태욱·최현묵·이종원·조강주·김선덕·송미경,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유철·김찬호, 「혁신도시 개발성과의 평가와 검증에 관한 연구: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0, pp. 47~67.
- 이훈영, 『이훈영 교수의 SPSS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담, 2015.
- 장덕현·조성겸,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은 필요한가?: 중간점 있는 척도와 없는 척도 간 측정 결과 비교」, 『조사연구』, 제18권 제4호, 2017, pp. 1~24.
- 전라남도청, 「혁신도시 소통·화합의 장 2022 빛가람 페스티벌 성황」, 보도 자료, 2022. 10. 23.
- 정유선,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사례를 대상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2020.
- 조규민·손동욱,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07권, 2020, pp. 61~78.

#### 〈외국 문헌〉

- Behar, A. and J. Mok, “Does public-sector employment fully crowd out private-sector employment?,”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3(4), 2019, pp. 1891~1925.
- Caponi, V., “The effects of public sector employment on the economy,” *IZA World of Labor*, 2017.
- Faggio, G. and H. Overman, “The effect of public sector employment on local labour marke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79, 2014, pp. 91~107.
- Faggio, G., “Relocation of public sector workers: Evaluating a place-based policy,” *Journal of Urban Economics*, 111, 2019, pp. 53~75.
- Faggio, G., T. Schluter, and P. vom Berge,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Evidence from a German government move*, SERC Discussion Papers 0229, Spatial Economics Research Centre, LSE, 2019.

Jofre-Monseny, J., J. I. Silva, and J. Vázquez-Grenno,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public employmen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82(103406), 2020.

Kutner, M. H., C. J. Nachtsheim, J. Neter, and W. Li, *Applied linear statistical models*. McGraw-hill, 2005.

Marshall, J. N., D. Bradley, C. Hodgson, N. Alderman, and R. Richardson, "Relocation, relocation, relocation: assessing the case for public sector dispersal." *Regional Studies*, 39(6), 2005, pp. 767~787.

Western Development Commission, *Moving West: An exploratory study of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the relocation of public sector offices to towns in the western region*, 2008.

##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049&viewCls=lsRvsDocInfoR#>, 검색일자: 2023. 3. 23.

\_\_\_\_\_,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검색일자: 2023. 3. 23.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https://innocity.molit.go.kr>, 검색일자: 2023. 2. 16.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검색일자 : 2023. 3. 23.

지방재정365,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https://www.lofin365.go.kr/portal/LF5100000.do>, 검색일자: 2023. 10. 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검색일자: 2023. 2. 28.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등(2004헌마554, 2004헌마566) 결정, [https://isearch.court.go.kr/search.do#view.do?link=12741\\_010300](https://isearch.court.go.kr/search.do#view.do?link=12741_010300), 검색일자: 2023. 3. 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http://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o?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자 : 2023. 5. 2.

\_\_\_\_\_,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자 : 2023. 5. 2.

\_\_\_\_\_,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http://kosis.kr/upsHtml/online.do?isOnline=Y&PART=G&pubcode=ZY&isNew=Y&dev=Y#gongDiv\\_ZY](http://kosis.kr/upsHtml/online.do?isOnline=Y&PART=G&pubcode=ZY&isNew=Y&dev=Y#gongDiv_ZY), 검색일자:

2023. 5. 12.

\_\_\_\_\_,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자 : 2023. 5. 2.

\_\_\_\_\_,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자 : 2023. 5. 2.

\_\_\_\_\_,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자 : 2023. 5. 2.

\_\_\_\_\_,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자 : 2023. 5. 2.

## 부 록

### 1.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혁신도시	기관명	이전인원 (명) <sup>1)</sup>	기관유형	이전시기
부산 혁신도시 (13개 기관)	국립해양조사원	97	소속기관	2012. 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4	소속기관	2015.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57	기타공공기관	2015.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58	준정부기관	2017. 12.
	주택도시보증공사	286	공기업	2014. 12.
	한국자산관리공사	760	준정부기관	2014. 12.
	한국주택금융공사	295	준정부기관	2014. 11.
	한국예탁결제원	434	기타공공기관	2014. 11.
	한국남부발전(주)	288	공기업	2014. 10.
	영화진흥위원회	110	기타공공기관	2013. 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98	준정부기관	2014. 9.
	영상물등급위원회	29	기타공공기관	2013. 9.
	게임물관리위원회	123	기타공공기관	2013. 10.
대구 혁신도시 (10개 기관)	신용보증기금	690	준정부기관	2014. 12.
	한국산업단지공단	173	준정부기관	2014.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0	준정부기관	2014. 9.
	중앙교육연수원	99	소속기관	2015.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0	준정부기관	2013. 10.
	한국사학진흥재단	68	기타공공기관	2014. 3.
	중앙신체검사소	55	소속기관	2012. 12.
	한국부동산원	367	공기업	2013. 8.
	한국가스공사	848	공기업	2014. 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up>2)</sup>	557	준정부기관	2015. 7.	

혁신도시	기관명	이전인원 (명) <sup>1)</sup>	기관유형	이전시기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1,870	공기업	2014. 11.
	한전 KPS(주)	482	공기업	2014. 12.
	한국전력거래소	305	준정부기관	2014. 9.
	국립전파연구원	142	소속기관	2014. 6.
	우정사업정보센터	816	소속기관	2013.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0	준정부기관	2014. 2.
	한국인터넷진흥원	558	준정부기관	2017. 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6	소속기관	2013. 12.
	한국농어촌공사	778	준정부기관	2014.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97	준정부기관	2019.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6	기타공공기관	2015. 7.
	한전 KDN(주)	944	공기업	2014.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4	기타공공기관	2014. 4.
	한국콘텐츠진흥원	171	준정부기관	2014.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22	준정부기관	2014.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1	준정부기관	2014. 12.
울산 혁신도시 (9개 기관)	한국동서발전(주)	270	공기업	2014. 6.
	한국석유공사	832	공기업	2014. 11.
	한국에너지공단	362	준정부기관	2019. 2.
	에너지경제연구원	184	기타공공기관	2014. 1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26	소속기관	2013. 1.
	근로복지공단	400	준정부기관	2014. 3.
	한국산업인력공단	415	준정부기관	2014.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24	준정부기관	2014.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30	소속기관	2015. 12.	
강원 혁신도시 (11개 기관) <sup>3)</sup>	대한석탄공사	105	공기업	2014. 12.
	한국광해광업공단	736	준정부기관	2015.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39	준정부기관	2015. 12.
	국민건강보험공단	1,301	준정부기관	2015.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6	준정부기관	2013. 12.
	대한적십자사	139	기타공공기관	2014. 5.

혁신도시	기관명	이전인원 (명) <sup>1)</sup>	기관유형	이전시기
강원 혁신도시 (11개 기관) <sup>3)</sup>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70	소속기관	2013. 11.
	도로교통공단	308	준정부기관	2015. 11.
	한국관광공사	500	준정부기관	2014. 12.
	국립공원공단	197	준정부기관	2017.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7	공직유관단체	2016. 12.
충북 혁신도시 (11개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6	준정부기관	2015.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1	기타공공기관	2014. 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23	소속기관	2016. 9.
	법무연수원	114	소속기관	2015. 3.
	한국교육개발원	440	기타공공기관	2017.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01	기타공공기관	2018. 2.
	국가기술표준원	290	소속기관	2013. 11.
	한국소비자원	285	준정부기관	2015. 11.
	한국가스안전공사	370	준정부기관	2014. 12.
	한국고용정보원	280	준정부기관	2017.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95	기타공공기관	2016. 12.
전북 혁신도시 (12개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228	준정부기관	2013. 11.
	농촌진흥청	449	소속기관	2014. 7.
	국립농업과학원	1,162	소속기관	2014. 7.
	국립식량과학원	318	소속기관	2015.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81	소속기관	2015. 3.
	국립축산과학원	314	소속기관	2015. 3.
	한국농수산대학	161	소속기관	2015.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00	소속기관	2013. 8.
	한국전기안전공사	296	준정부기관	2014. 6.
	국민연금공단	1,218	준정부기관	2015.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8	기타공공기관	2015. 7.
	한국식품연구원	505	기타공공기관	2017. 9.
	경북 혁신도시 (1개 기관)	한국도로공사	1,046	공기업
한국교통안전공단		318	준정부기관	2014.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0	소속기관	2013. 12.

혁신도시	기관명	이전인원 (명) <sup>1)</sup>	기관유형	이전시기
경북 혁신도시 (11개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630	소속기관	2015. 12.
	국립중자원	95	소속기관	2014. 7.
	조달청 조달품질원	83	소속기관	2013. 12.
	우정사업조달센터	110	소속기관	2013. 4.
	기상청 기상통신소	4	소속기관	2013. 6.
	대한법률구조공단	87	기타공공기관	2014.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9	기타공공기관	2016. 3.
	한국전력기술(주)	2,879	공기업	2015. 8.
경남 혁신도시 (11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60	공기업	2015. 4.
	국토안전관리원	587	준정부기관	2017. 12.
	주택관리공단(주)	108	기타공공기관	2016.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66	준정부기관	2014. 7.
	한국세라믹기술원	250	기타공공기관	2015.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0	기타공공기관	2015. 3.
	중앙관세분석소	26	소속기관	2013. 1.
	한국남동발전(주)	290	공기업	2014. 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76	준정부기관	2016. 7.
	국방기술품질원	375	기타공공기관	2014. 5.
한국저작권위원회	151	기타공공기관	2015. 6.	
제주 혁신도시 (6개 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43	소속기관	2012. 12.
	국세공무원교육원	69	소속기관	2015. 9.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1	소속기관	2015. 9.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26	소속기관	2015. 10.
	국립기상과학원	162	소속기관	2013. 12.
	공무원연금공단	276	준정부기관	2015. 9.

주: 1)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인원은 지방이전계획상 승인인원 기준

2) 일부인원(55명)은 제주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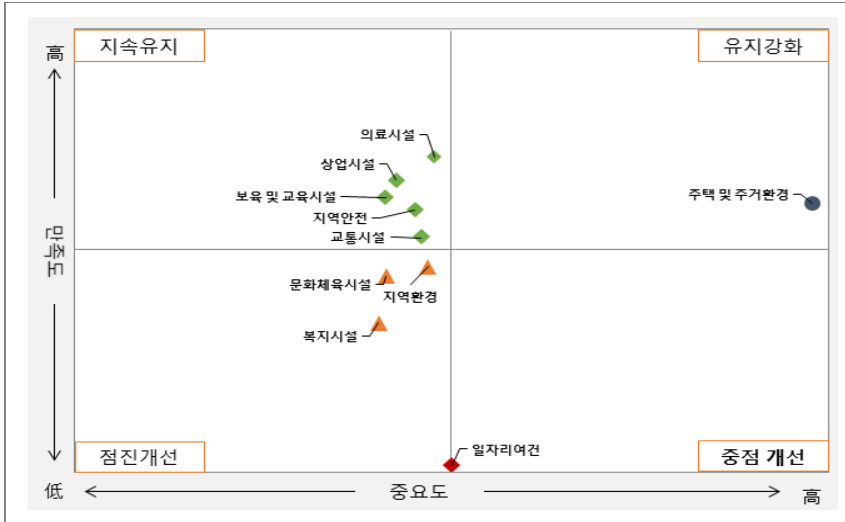
3) 일부인원(36명)은 울산으로 이전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https://innocity.molit.go.kr>, 검색일자: 2023.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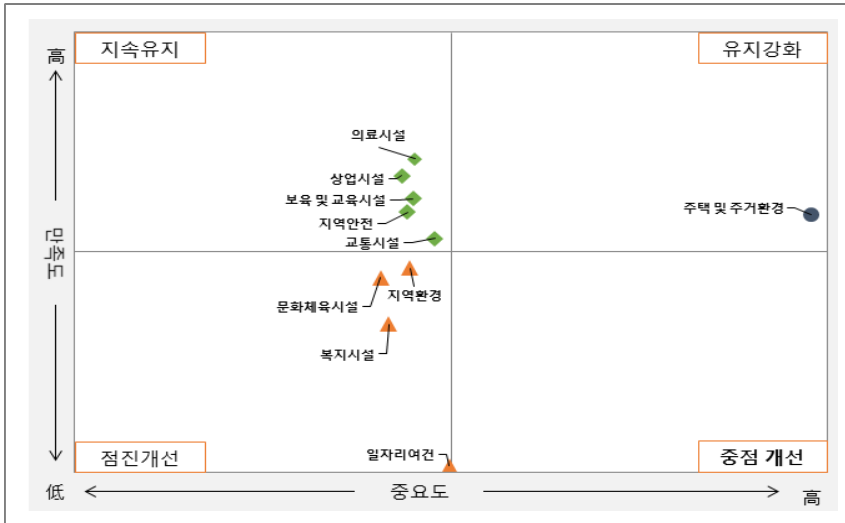
## 2. 혁신도시별 IPA 분석

[부그림 1]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부산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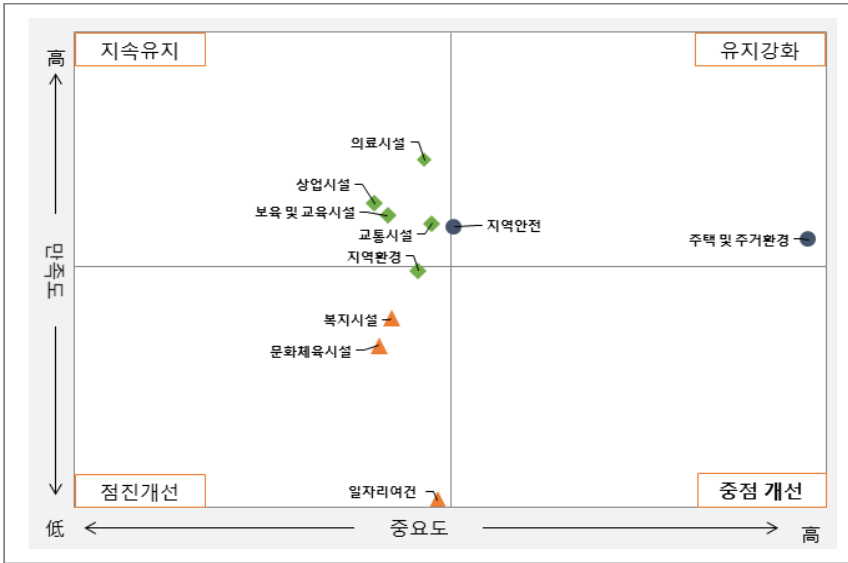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2]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대구 혁신도시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3]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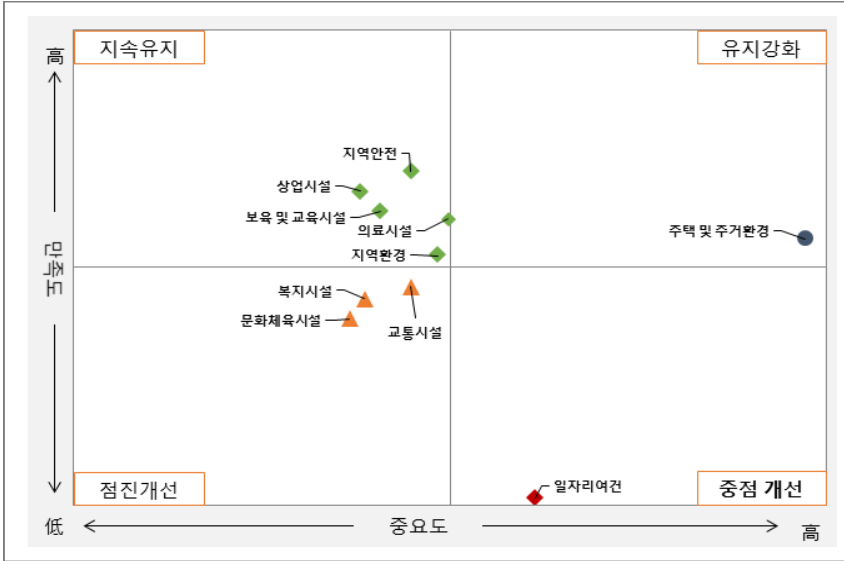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4]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울산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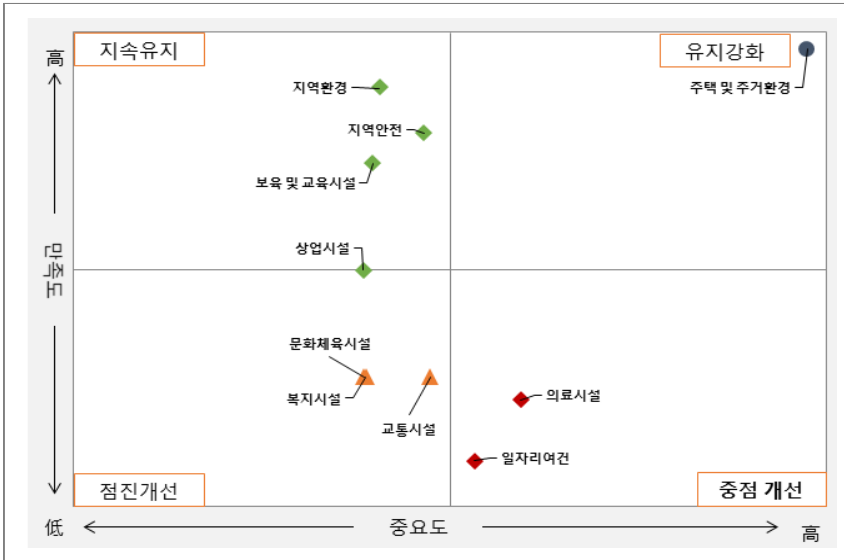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5]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강원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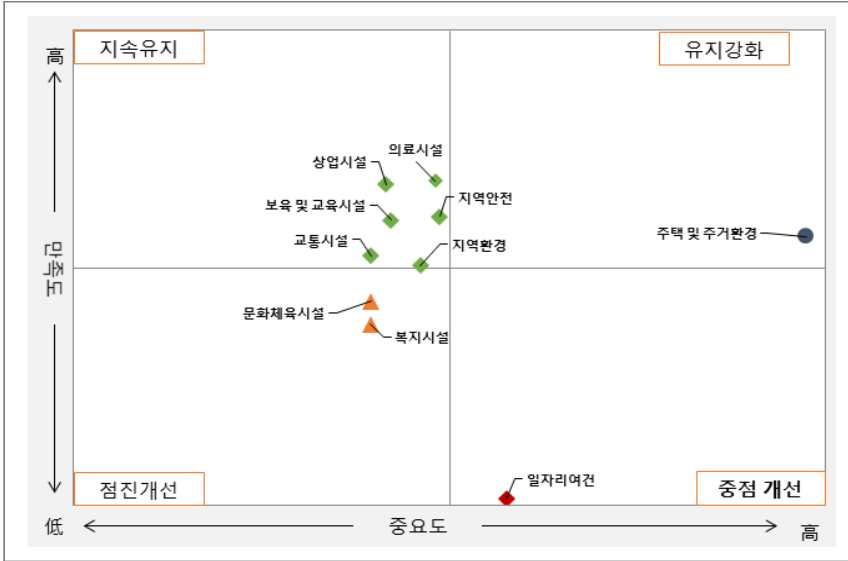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6]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충북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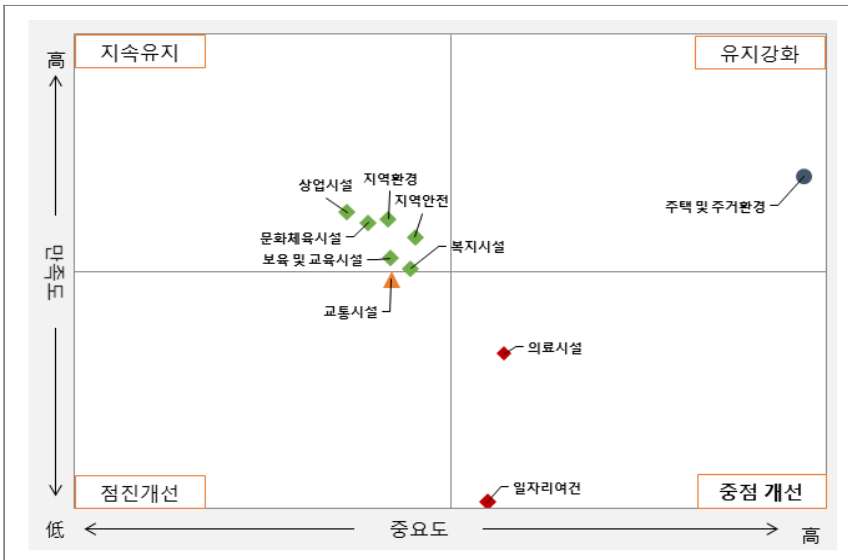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7]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전북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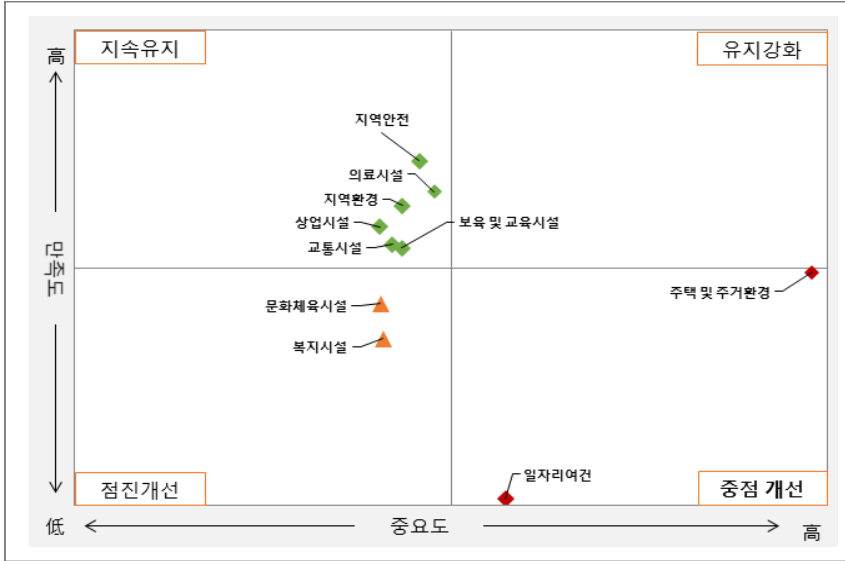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8]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경북 혁신도시



자료: 저자 작성

[부그림 9]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분석 결과: 경남 혁신도시



자료: 저자 작성

### 3. 설문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이경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혁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 주시어 응답을 해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문항)

SQ1. 귀하께서는 현 거주지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이십니까?

- 1)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이다. (설문종료)
- 2)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다.

(스크린 & 쿼터문항)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        )세

- 1) 만 20세 미만(설문종료)
- 2) 만 20~29세
- 3) 만 30~39세
- 4) 만 40~49세
- 5) 만 50~59세
- 6) 만 60세 이상

## 1. 인구통계학적 질문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쿼터문항)

DQ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1)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 2) 대구(동구)       |
| 3) 광주·전남(나주시)        | 4) 울산(중구)       |
| 5) 강원(원주시)           | 6) 충북(진천군, 음성군) |
| 7) 전북(전주시)           | 8) 경북(김천시)      |
| 9) 경남(진주시)           |                 |

DQ2-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읍·면·동)은 어디입니까?

(Prog: 시군구별로 읍면동 제시)

DQ2-2. 귀하는 현재 혁신지구 내 거주하고 계십니까?

- 1) 혁신지구 내 거주            2) 혁신지구 외 거주

DQ3. 귀하가 현 거주 '시'나 '군'에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미만인 경우는 '개월'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     )개월

DQ3-1. 귀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이전하기 전부터 현 거주 '시'나 '군'에 거주 하셨습니까?

- 1) 공공기관 이전 전부터 거주            2) 공공기관 이전 후부터 거주

DQ3-2. (DQ3-1의 2번 응답자) 귀하가 현재 거주지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 1) 수도권 거주(서울, 경기, 인천)    2) 수도권 외 광역시 거주(세종시 포함)  
3) 그 외 지역 (     )

DQ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타(                  )

DQ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공공임대주택          2) 아파트          3) 단독주택          4) 원룸·오피스텔  
5) 다세대·연립주택      6) 기타(                  )

DQ6.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을 합산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만원 미만                                  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 600만원 이상

DQ7. 귀하의 동거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동거 중인 가구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

DQ8.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 기혼                  2) 미혼                  3) 이혼·사별

DQ9. 귀하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 1)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있음(DQ9-1로 이동)  
2)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없음(DQ10으로 이동)

DQ9-1. (DQ9의 1번 응답자만) 자녀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수응답 가능)

※ 자녀 수대로 응답하되, 만약 동일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번만 응답(예: 초등학교 자녀 2명이면, '초등학교'만 응답)

- 1) 영유아    2) 초등학교    3) 중학생    4) 고등학교    5) 성인(대학생 포함)



DQ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전문직 또는 관리직
- 2) 농림·수산·축산업 종사자
- 3) 자영업
- 4) 사무·서비스직
- 5) 학생
- 6) 주부
- 7) 무직
- 8) 기타(    )

## 2. 정주여건

※ 응답 시 고려사항: 아래 각각의 정주여건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경남 진주시 거주): 경남 진주시 내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응답
- ② 개별 시설에 대해 양과 질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양적 측면): 지역 내 백화점이 없어 불편하거나 있더라도 그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고려하여 응답
  - 예시(질적 측면): 시설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고려하여 응답
- ③ 본인이 이용경험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이용경험 없음): 응답자 본인이 미혼이라 교육시설에 대해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응답

## 2.1. 지역(시군구) 내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주택 유형별로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응답 바랍니다.)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1.1. 공공임대주택: 주택 공급량	1	2	3	4
2.1.2. 공공임대주택: 주택의 질(면적, 냉난방 시설 등)	1	2	3	4
2.1.3.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쓰레기처리, 주변도로 등)	1	2	3	4
2.1.4. 아파트: 주택 공급량	1	2	3	4
2.1.5. 아파트: 주택의 질(면적, 냉난방 시설 등)	1	2	3	4
2.1.6. 아파트: 기반시설(쓰레기처리, 주변도로 등)	1	2	3	4
2.1.7. 원룸·오피스텔: 주택 공급량	1	2	3	4
2.1.8. 원룸·오피스텔: 주택의 질(면적, 냉난방 시설 등)	1	2	3	4
2.1.9. 원룸·오피스텔: 기반시설(쓰레기처리, 주변도로 등)	1	2	3	4
2.1.10.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 2.2. 지역 내 상업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2.1. 슈퍼마켓·식료품상점	1	2	3	4
2.2.2. 편의점	1	2	3	4
2.2.3. 대형마트	1	2	3	4
2.2.4. 백화점	1	2	3	4
2.2.5. 전통시장	1	2	3	4
2.2.6. 식당·음식점	1	2	3	4
2.2.7. 찻집·카페 등	1	2	3	4
2.2.8. 상업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2.2.A (2.2.8.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는 어느 지역의 상업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1)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시군구 상업시설 이용
- 2)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 내 상업시설 이용
- 3)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재 거주지역 내 상업시설 이용
- 4) 기타 (                    )

2.3.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3.1. 영화관	1	2	3	4
2.3.2. 공연·전시장(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1	2	3	4
2.3.3. 휴양지 및 관광지	1	2	3	4
2.3.4. (공공) 도서관	1	2	3	4
2.3.5. 실내 체육관	1	2	3	4
2.3.6. 실외 운동장	1	2	3	4
2.3.7. 녹지 공간 및 공원 등	1	2	3	4
2.3.8.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2.3.A (2.3.8.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는 어느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1)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시군구 문화체육시설 이용
- 2)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 내 문화체육시설 이용
- 3)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재 거주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이용
- 4) 기타 (                    )

2.4. 지역 내 보육 및 교육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4.1.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1	2	3	4
2.4.2. 초등학교	1	2	3	4
2.4.3. 중·고등학교	1	2	3	4
2.4.4. 사설 학원 및 독서실 등	1	2	3	4
2.4.5. 보육 및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2.4.A (2.4.6.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는 어느 지역의 보육 및 교육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1)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시군구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 2)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 내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 3)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재 거주지역 내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 4) 기타 (                    )

2.5. 지역 내 복지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5.1.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시설	1	2	3	4
2.5.2. 노인정·경로당 노인복지시설	1	2	3	4
2.5.3. 돌봄센터 등 요양시설	1	2	3	4
2.5.4. 청소년회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	1	2	3	4
2.5.5.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2.5.A (2.5.5.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는 어느 지역의 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1)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시군구 복지시설 이용
- 2)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 내 복지시설 이용
- 3)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재 거주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
- 4) 기타 (                    )

2.6. 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6.1. 대학병원 · 종합병원	1	2	3	4
2.6.2. 동네 의원(외래 중심)	1	2	3	4
2.6.3. 치과 병 · 의원	1	2	3	4
2.6.4. 한의원(한방 병원)	1	2	3	4
2.6.5. 약국(한약국 포함)	1	2	3	4
2.6.6. 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2.6.A (2.6.6.의 1, 2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는 어느 지역의 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 1)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시군구 의료시설 이용
- 2)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 내 의료시설 이용
- 3)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재 거주지역 내 의료시설 이용
- 4) 기타 (                    )

2.7. 지역 내 교통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7.1. 시내버스 · 마을버스	1	2	3	4
2.7.2. 택시	1	2	3	4
2.7.3. 자전거	1	2	3	4
2.7.4. 보행로	1	2	3	4
2.7.5. 시외 · 고속버스	1	2	3	4
2.7.6. 기차	1	2	3	4
2.7.7. (고속)도로 접근성	1	2	3	4
2.7.8. 주차장	1	2	3	4
2.7.9. 교통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 2.8. 지역의 일자리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8.1. 일자리 제공의 충분성	1	2	3	4
2.8.2. 정규직 일자리 증가	1	2	3	4
2.8.3. 전문직·관리직 일자리 증가	1	2	3	4
2.8.4. R&D 및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증가	1	2	3	4
2.8.5. 일자리 여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 2.9. 지역의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9.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등)	1	2	3	4
2.9.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1	2	3	4
2.9.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1	2	3	4
2.9.4. 소음 및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 소음 등)	1	2	3	4
2.9.5. 녹지환경(자연경관 등)	1	2	3	4
2.9.6. 지역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 2.10. 지역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10.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관리	1	2	3	4
2.10.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유지보수	1	2	3	4
2.10.3. 교통사고 처리 및 대응	1	2	3	4
2.10.4. 범죄 예방 및 치안 관리	1	2	3	4
2.10.5. 화재(산불 포함) 대응	1	2	3	4
2.10.6. 응급의료시스템	1	2	3	4
2.10.7.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2.11. 지역 내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우선순위
1. 주택 및 주거환경	
2. 상업시설	
3. 문화체육시설	
4. 보육 및 교육시설	
5. 복지시설	
6. 의료시설	
7. 교통시설	
8. 일자리 여건	
9. 환경	
10. 안전성	



### 3. 이웃관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주변 이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3.2.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3.3. 주변 이웃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	2	3	4
3.4.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이웃들이 있다	1	2	3	4
3.5. 주변 이웃들을 신뢰한다.	1	2	3	4
3.6. 지역 내 이웃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 4.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우리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4.2.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4.3.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직접 보거나 경험(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4.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1	2	3	4

### 5. (DQ3-1의 2번 응답자만)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의 인지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1	2	3	4
5.2.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1	2	3	4

## 6.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기여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의 거주인구 증가에 기여하였다	1	2	3	4
6.2.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였다	1	2	3	4
6.3.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1	2	3	4
6.4.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하다	1	2	3	4
6.5. 현재 거주지역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	2	3	4

6-1. 앞서 설문에서 제시한 항목 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6-2.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7. 삶의 만족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현재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7.2. 현재 거주지역(시군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7.3. 현재 거주지역(시군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다	1	2	3	4

8-1. 지역사회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기관의 지원사항 등)

8-2.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

이경영 · 최근호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19년 까지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및 인구 증대와 같은 직접효과에 주목하였고, 이전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확장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고 공공기관 이전지역 거주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9개 혁신도시 내 혁신지구가 위치한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및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였고, 각 혁신도시의 현재 거주민을 상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인구 및 일자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인구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된 2019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혁신도시 전체의 인구수는 감소하되, 세대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순이

동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가 더 많았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가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혁신도시의 사업체 및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보다 평균적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거주민보다는 비광역시 거주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체감 정도가 더 높았으며, 혁신지구와 인접할수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의 체감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측면에서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여건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원주민과 이주민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상업시설 및 의료시설 등에서 원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광역시 지역 거주민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광역시 거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후에 이루어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정에서 입지 선정 시 지역의 발전 정도와 기관 간 균형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일자리 정책 개선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기준을 재검토함으로써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 정도를 증대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시 지역과 비광역시 지역 간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A Study on the Residents'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Public Sector Relocation

---

Kyung-Young Lee and Geunho Choi

Several studies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sector relocation between 2005 and 2019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 has analyzed the impact of public sector relocation primarily in terms of direct effects, such as changes in employment and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new insights by analyzing the perceived effects of relocation by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where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relocated, based on the finding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The analysis target of this study is 12 local government where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relocated. We conducted a survey of residents in the area and analyzed changes in population and employment between 2005 and 2021.

The analysis revealed that from 2005 to 2018, there was an increasing population trend in the areas where public institutions were relocated, but starting from 2019, a decline in population was observed. On the one hand, between 2013 and 2016, there was a significant population net-migration from the greater Seoul to other areas, but since 2016, it has been observed that population outflow from non-greater Seoul exceeds

population inflow. In the case of businesses and employment, a consistent trend of growth in both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workers has been observe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it was found that residents of 'Do' perceived a higher level of effectiveness in the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than residents of metropolitan city, and it was further revealed that the closer the relocation district, the higher the perceived level of relocation effect. Residents exhibited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commercial facilities among various residential conditions, while their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was found to be the lowest. Additionally, the IPA analysis shows that employment had the least satisfaction relative to their importance. Indigenous residents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than immigrants in commercial and medical facilities. Lastly, it was observed that residents in 'Do' showed higher awareness of the relocated public institu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engagement compared to residents in metropolitan city.

The implications of public sector relocation, as derived from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ve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institutions. The second point is that government must reconsider the existing standards of employment policy and devise ways to enhance the perceived benefits for residents. Lastly, a distinct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strategy must be developed, distinguishing between regions 'Do' and metropolitan city.

## 저자약력

### 이경영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최근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진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보고서 2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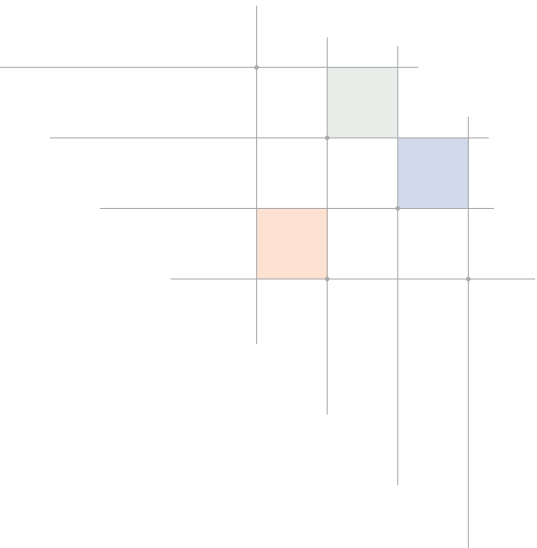
##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발행	행	2023년 12월 29일
저자	자	이경영 · 최근호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jpt.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20,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979-11-6655-258-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9 791166 552588 94320  
ISBN 979-11-6655-258-8